

#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정부 국정과제

2013. 2



# 순서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I . 국정과제 현황 .....            | 1   |
| II . 국정과제 추진계획 .....         | 9   |
| 국정목표1 :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.....   | 11  |
| 국정목표2 : 맞춤형 고용·복지 .....      | 67  |
| 국정목표3 :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..... | 105 |
| 국정목표4 : 안전과 통합의 사회 .....     | 129 |
| 국정목표5 :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..... | 177 |
| 추진기반 : 신뢰받는 정부 .....         | 205 |





## **I . 국정과제 현황**



# 박근혜정부 140대 국정과제

## 국정목표 1

##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

| 전략                   | 국정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       | 1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 산업 육성<br>2 IT·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<br>3 산·학·연·지역 연계를 통한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<br>4 서비스 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<br>5 자본시장제도 선진화<br>6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<br>7 세계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<br>8 청년 친화적 일자리 확충기반 조성<br>9 고용친화적 정부정책을 위한 고용영향평가제 강화<br>10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로 따뜻한 성장 도모 |
| ②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| 11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<br>12 농림축산산업의 신성장 동력화<br>13 해양 신성장 동력 창출 및 체계적 해양관리<br>14 수산의 미래 산업화<br>15 보건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<br>16 고령 친화산업 육성<br>17 물류·해양·교통체계 선진화<br>18 해외건설·플랜트 및 원전산업 진출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③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    | 19 중소기업 성장 희망 사다리 구축<br>20 중소·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<br>21 창업·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<br>22 소상공인·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<br>23 영세 운송업 등 선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④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| 24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<br>25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<br>2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국가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<br>27 지식재산의 창출·보호·활용 체계 선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⑤ 원칙이 바로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| 28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<br>29 소비자 권익보호<br>30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선<br>31 대기업 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<br>32 기업지배구조 개선<br>33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⑥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     | 34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경제의 안전판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|
|-----------|
| <b>전략</b> |
|-----------|

|  |
|--|
|  |
|--|

|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
| <b>국정과제</b> |
|-------------|
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35 |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 대응       |
| 36 | 부동산 시장 안정화            |
| 37 |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           |
| 38 | 안정적 식량수급 체계 구축        |
| 39 |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          |
| 40 | 건전 재정기조 정착            |
| 41 | 공공부문 부채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|

**국정목표 2**

**맞춤형 고용·복지**

|           |
|-----------|
| <b>전략</b> |
|-----------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b>7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</b>     |
| <b>8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</b>    |
| <b>9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</b>      |
| <b>10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</b> |

|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
| <b>국정과제</b> |
|-------------|
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42 |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|
| 43 | 국민중심의 복지 전달체계 개편           |
| 44 | 건강한 가정 만들기                 |
| 45 |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        |
| 46 |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         |
| 47 |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     |
| 48 |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   |
| 49 |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 증진          |
| 50 | 다문화 가족 적응 지원강화             |
| 51 |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     |
| 52 |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             |
| 53 |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망 강화       |
| 54 |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          |
| 55 |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         |
| 56 | 주거안정 대책 강화                 |
| 57 | 서민 금융부담 완화                 |
| 58 | 교육비 부담 경감                  |
| 59 | 통신비 부담 낮추기                 |
| 60 | 농어가 소득 증대                  |
| 61 |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             |
| 62 |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       |
| 63 | 장시간 근로개선 및 정년연장으로 함께 일하기   |
| 64 | 경기변동 대비 고용안정 노력 및 지원 강화    |
| 65 | 행복한 임신과 출산                 |
| 66 |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      |
| 67 |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(0~5세)       |
| 68 |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      |

### 국정목표 3

###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

| 전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정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b>11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</b><br><br><b>12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 체제 구축</b><br><br><b>13 나를 찾는 문화, 모두가 누리는 문화 구현</b> | 69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0 대입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입시 간소화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1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2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3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4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5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 체제 구축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6 문화재정 2% 달성 및 문화기본법 제정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7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8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9 문화유산 보존·활용 및 한국문화 진흥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0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1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2 생태휴식 공간 확대 등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 |

### 국정목표 4

### 안전과 통합의 사회

| 전략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정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b>14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</b>   | 83 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4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5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6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7 아동인권 보호강화 및 건강한 성장·발달지원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8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9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구현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0 민생치안 역량강화 기반 조성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1 생활 안전 관련 공익신고 범위확대 및 신고자 보호 강화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2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 체계 강화              |
| <b>15 재난·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</b> | 93 항공, 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4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 피해구제 강화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5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6 에너지공급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7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조성 및 근로자 건강증진       |

| 전략 |
|----|
|----|

|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|
| 16 |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|
| 17 |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  |
| 18 |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|

| 국정과제 |
|------|
|------|

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98  |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       |
| 99  |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           |
| 100 | 안정적인 에너지수급 및 산업구조 선진화    |
| 101 |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     |
| 102 |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            |
| 103 |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           |
| 104 | 해양환경 보전과 개발의 조화          |
| 105 | 자원·에너지의 낭비를 줄여 자원순환사회 실현 |
| 106 | 과거와의 화해를 위한 과거사 명예회복     |
| 107 | 공직임용의 기회균등과 공평한 대우       |
| 108 | 대화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         |
| 109 | 공공갈등 관리 시스템 강화           |
| 110 | 사회 통합적 인권보호 체계 구축        |
| 111 |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       |
| 112 |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        |
| 113 | 지방대학 지원 확대               |
| 114 |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성 강화          |
| 115 |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·지역공동체 활성화 |
| 116 |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 제고          |

**국정목표 5**

**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**

| 전략 |
|----|
|----|
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19 |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   |
| 20 |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|
| 21 | 국민과 함께 하는 신뢰외교 전개     |

| 국정과제 |
|------|
|------|

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17 |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            |
| 118 |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     |
| 119 | 한미군사동맹 지속적 발전 및 주변국 국방협력 강화      |
| 120 | 혁신적 국방경영 및 국방과학기술 발전             |
| 121 | 보람있는 군복무 및 국민존중의 국방정책 추진         |
| 122 | 명예로운 보훈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23 | 북핵문제의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              |
| 124 |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         |
| 125 |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           |
| 126 | 통일 대비 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 준비        |
| 127 |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확대          |
| 128 | 한미동맹과 한중동반자 관계의 조화·발전 및 한일관계 안정화 |
| 129 | 신흥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산업자원 협력 강화         |
| 130 |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중견국 실현      |
| 131 | 재외국민 안전·권익 보호와 공공외교·일자리 외교 확대    |
| 132 | FTA 네트워크 등 경제협력 역량 강화            |
| 133 | ODA 지속확대 및 모범적·통합적 개발협력 추진       |

**추진 기반**

**신뢰받는 정부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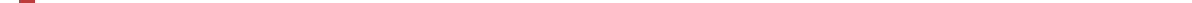
**전략**

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개방·공유·협력을 통한 정부 3.0 달성 |
| ②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        |

**국정과제**

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34 |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.0 구현     |
| 135 | 세종시 조기정착을 통한 정부효율 극대화   |
| 136 |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등 합리화      |
| 137 |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및 규제합리화 |
| 138 |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         |
| 139 |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        |
| 140 | 지하경제 양성화 등 조세정의 확립      |





## Ⅱ. 국정과제 추진계획



## 국정목표 1

### -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

|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|
| 추진전략 1 .....       | 13 |
|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       |    |
| 추진전략 2 .....       | 25 |
|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|    |
| 추진전략 3 .....       | 35 |
|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    |    |
| 추진전략 4 .....       | 43 |
|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|    |
| 추진전략 5 .....       | 49 |
|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|    |
| 추진전략 6 .....       | 57 |
| 성장을 뒷받침 하는 경제운영    |    |



- (1)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 산업 육성
- (2) IT·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
- (3) 산·학·연·지역 연계를 통한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
- (4) 서비스 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
- (5) 자본시장제도 선진화
- (6)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
- (7) 세계 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
- (8) 청년 친화적 일자리 확충기반 조성
- (9) 고용친화적 정부정책을 위한 고용영향평가제 강화
- (10)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로 따뜻한 성장 도모



## 가. 과제개요

- ☐ 과학기술의 책임과 역할을 확장하여, 新산업을 창출하고 사회 이슈를 해결하는 등 국민행복에 실질적으로 기여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 전환) 기술·지식 확보가 목표인 현재의 분절형 R&D를 新산업 창출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통섭하는 「생태계 창조형 R&D」로 변경
  - \* 연구개발 또는 기존 기술의 발굴, 글로벌 시장개척을 위한 인프라, 제도개선·규제완화, 공공구매 연계 등까지 포함
- ② 과학기술과 아이디어·상상력을 융합한 新산업 창출
  - (신성장동력)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예측으로 유망 성장동력을 발굴하고, 문화컨텐츠·SW·인문·예술과 융합
  - (사회이슈해결) 고령화·에너지 등의 국가당면 이슈를 해결하고, 사회복지·안전 등 공공시스템과 연계한 新시장 창출 지원
  - (실용기술 활용) 사업화·창업 아이디어와 기술 보유자, 투자자를 매칭하고, 제품화를 위한 후속 R&D와 공공구매 연계 등 지원
  - (과학기술 서비스) 빅데이터·초고성능컴퓨팅 등을 활용한 공공·민간 서비스 확대와 이를 통한 서비스산업 육성 등
  - (거대·전략기술 기반산업) 우주발사체·인공위성, 대형 가속기, 원자력 등 대형 국가프로젝트 민간 개방으로 산업생태계 구축
- ③ (과학기술 국제화) 과학기술을 활용한 자원외교, 과학기술 ODA 등을 통한 과학한류와 해외일자리 창출
  - 지구촌 기술나눔 센터(국내)와 적정과학기술 거점센터(현지)를 구축, 수익창출이 가능한 지역개발사업으로 연결

## 가. 과제개요

- IT,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성장정체에 직면한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산업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

\* 제조경쟁력(美 경쟁력委, 位): ('10) 3 → ('12) 6

- 유망 융합신산업을 발굴·육성하는 한편 업종간 융합 성공모델 (수익모델) 확산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모멘텀과 일자리 창출 추진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경제성장을 주도해 온 주력산업이 새로운 시장과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창의성과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융합형 성장 환경을 조성
  - 기존 지식서비스 관련 연구소·지원기관들의 기능을 강화하고 연계·조정함으로써, ‘지식+제조업’ 융합의 본격 확산 지원
  - R&BD 전주기에 걸쳐 디자이너, 스마트콘텐츠 전문가 등이 참여토록 ‘산업기술 R&D 기획·평가 체제’를 개편
  - 다양한 기업·전문가들이 직접 참여·소통하여 융합 성공모델을 창출하는 ‘산업융합포럼(‘12.12월 창립)’을 활성화하고 성공적인 수익모델을 발굴·확산
- ② 소재·부품, 뿌리산업분야(중소·중견기업 중심)의 융합 확산을 위해 시스템반도체(전력반도체)·첨단센서 등 차세대 HW 기술개발 및 나노소재, SW융합 부품 등 시장선도형 ‘핵심 소재·부품’ 개발
  - 소재·부품기업 대상으로 SW적인 경영진단, 공정혁신, 마케팅 전략 등을 제공하여 뿌리산업의 작업환경 고도화 추진
- ③ 항공전자, 랜딩기어 등 항공산업 핵심부품 기술개발·인프라 구축 및 C(탄소)-소재의 독자 기술력·생산능력 확보 → 신산업 창출

### 가. 과제개요

- ☐ 지역 대학·산업·연구소와 지자체를 과학기술을 매개로 하는 융합 공동체로 육성하고, 창업과 신산업 창출의 생태계 조성

#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산·학·연 협력 패러다임을 「창업과 신산업 창출」로 전환
  - 산·학·연협력 총괄기구로서 대학 산·학·연협력단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기능재편과 전문인력(변리사 등) 충원 지원 확대
  -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이 창업으로 이어지는 대학 창업생태계 조성
  - 교수, 출연(연) 연구원의 기술창업·기술이전 활성화 지원
- ② 출연(연)은 산·학 협력 매개와 중소기업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강화
  - 「학연 교수제」와 학연 학생 제도 활성화를 지원하고, 출연금 중 일정비율(5~15%)은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토록 의무화
- ③ 과학기술-인재-산업을 연계하는 지역과학기술혁신 체제 정비
  - 분산·다기화된 지역 과학기술 지원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체계 구축(과학기술기본법 개정 검토)
  - 중앙정부 중심 지원에서 탈피, 지자체 스스로 지역내 산·학·연 자원과 기술혁신 수요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역량 육성
- ④ 지역별로 특성화된 창업생태계 조성
  - 과기특성화대학은 과학벨트·연구개발특구 제도와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사업화 전진기지의 선도모델로 육성
  - 지역별 거점대학을 지역 출연(연)과 연계 운영을 통해 지역산업 기술 공급처로 육성

### 가. 과제개요

- 유망 서비스산업의 전략적 육성 등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통해 부가가치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확대
  - 제조업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국가 전체 성장동력을 견인

#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) 서비스산업 행정지원 체제 구축, 지원근거 마련, 표준화 등 인프라 구축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추진
- ② (서비스산업발전 장단기 계획 수립)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5개년계획 등 장단기 계획 수립
- ③ (유망 서비스산업\* 집중 육성) 유망 서비스산업에 대해 산업별 집중육성대책을 마련하여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로 연결
  - 특히 유사 또는 이중 서비스간 결합, 융합 등 서비스 쏠분야에서 창조적 고부가가치화 추진
  - \* IT·S/W, 연구개발(R&D) 서비스업, 컨설팅 등 사업서비스, 문화·콘텐츠 분야, 사회서비스, 보건·의료서비스 등
- ④ (서비스산업 허브화 추진) 녹색기후기금(GCF) 유치를 계기로 서비스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의료·관광·교육·MICE(Meeting·Incentives·Convention·Exhibition)·R&D 등 서비스허브화 추진

## 가. 과제개요

- 자본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통해 우리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규율 확립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기업금융기능 강화) 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,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지원 등을 위한 선진형 투자은행(IB) 육성, 조건부자본증권\* 허용 등 기업자금조달수단 다양화

\*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식전환, 원리금상환 감면 등이 부여된 사채

- ② (투자자보호 강화) 개인의 합리적 투자를 위하여 투자자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<sup>1)</sup>하는 한편, 사전교육을 활성화하여 투자역량 제고 및 투자자 피해시 사후구제 강화<sup>2)</sup>

1) 공시정보 확대,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강화, 투자유의사항 정보제공 확대 등

2) 소액사건 분쟁조정 진행중 금융회사의 소송제기 금지 등 분쟁조정제도 개선

- ③ (불공정거래규제 강화)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기능 확대 등 강제조사를 강화하고, 과징금제도 도입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유인 최소화 도모

- ④ (거래소 발전) 자본시장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개선<sup>1)</sup>하는 한편, 시장별 특성 활성화 등을 통해 실물경제 지원기능 제고<sup>2)</sup>

1) 장외파생거래 중앙청산소, 증권시장 대체거래시스템 등 도입

2) 코넥스 신설, 유가증권·코스닥시장 진입·유지 부담 완화 등

## 가. 과제개요

- 높은 고용창출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중소기업·유통산업·외국인투자 등을 일자리창출 주역으로 육성
  - 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, 외국인투자·U턴투자 활성화, 산업R&D 사업화,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도입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동반성장 생태계 조성) 대기업·협력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·기술력 제고, 임금격차(대기업의 51.9% 수준) 해소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
  - 동반성장 확산·공정거래관행 정착을 위한 2·3차 협력사 대금 지급 모니터링시스템 보급,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확대(1차 협력사 포함)
  - 성과공유제\* 도입확인 기업을 지속 확대( '12년 77개 → '13년 100개)하며, 중견·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 활성화를 적극 유도
    - \* 성과공유제 : 대기업·협력업체간에 사전 약속에 따라 공동의 개선활동(R&D, 시장개척, 공정개선 등)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약정된 방식(단가 보장, 장기구매약정, 비용보전 등)으로 공유하는 협력활동
  - 대기업 비영리재단, 소셜벤처 등 기업의 공유가치창출(CSV) 활동을 활성화하여 기업경영·사회적 기여·일자리 창출을 연계
- ② (투자 유치) 외국인투자 조세감면, 입지지원,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프로젝트 중심으로 개편
  - U턴기업 지원 법적근거 마련, U턴 유망업종 전용산단 조성, 공동 R&D센터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집단U턴 유치
  - 각 경제자유구역의 중점 유치업종별 산업특화클러스터 조성
  - 기존 외국인 부동산투자 이민제도 외에 금융상품으로 투자유형을 다양화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도입
- ③ (선도자형 산업 R&D 및 사업화) 소재·장바·시스템·제품 생산기업이 공동 참여하여 새로운 가치사슬(Network형)을 만드는 R&D 프로젝트 발굴 지원 및 기술사업화·기술금융 활성화

## 가. 과제개요

- 개인정보 침해 정보에 대한 통신심의 축소, 산업 위축 규제 개선 및 인터넷 신산업 육성으로 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
-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통신심의 축소, 분쟁조정 기능 강화 및 규제 실태조사를 통한 산업 위축 규제 개선 등 추진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) 개인정보 침해 정보에 대한 통신심의는 대폭 축소하되, 명예훼손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보완
  - 임시조치\* 남용에 의한 표현의 자유 위축 방지(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권 신설, 임시조치 후 처리절차 마련 등)
  - \*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가 명예훼손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게시 글을 안보이도록 하는 제도
  - 인터넷 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구축하고,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역할을 확대하여 자율심의 기능 강화
- ② (인터넷 신산업 육성)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인프라 및 ICT 기술을 기반으로 클라우드,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창출
  - 클라우드 발전법을 제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정보 처리를 지원하고,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사업을 통하여 기반 조성
- ③ (산업 위축 인터넷 관련 규제 개선) 인터넷 관련 규제법령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실효성 없이 산업을 위축시키는 규제 폐지 등 개선
  - 인터넷 관련 규제는 다양한 부처 소관법률에 존재함을 감안, 규제개선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여 개선 추진

## 가. 과제개요

- 청년의 도전적인 해외진출 지원과 창직 활성화 등을 통해 청년의 일할 기회 확대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K-Move) 「글로벌 스펙초월 취업시스템」을 구축, 열정·잠재력 있는 청년을 선발하여 전문가 멘토링·맞춤형 교육훈련 등을 통해 인재로 양성한 후, 해외진출 지원
  - 「K-MOVE 포탈」 구축·운영을 통한 현지 일자리 정보를 통합·관리하고, 이를 통해 원스톱 종합서비스 제공
  - 「해외취업장려금제도」를 통한 현지 정착 지원과 해외 벤처 캐피탈의 국내 지원 및 로스쿨생 등의 해외 법률분야 취업 지원
- ② (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창직 활성화)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청년 사회적기업가 양성 확대
  - 자치단체-지역대학-지역기업 등이 연계·추진하는 「우리지역 키우는 창직사업」 신설 및 창직인턴제 확대
- ③ (공공부문 청년층 일자리 확대) 교원, 경찰, 소방, 복지, 고용분야 일자리의 단계적 확대 및 청년 채용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

## 가. 과제개요

- ☐ 정부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일자리 관점에서 평가,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고용친화적 사업 활성화 및 고용률 70% 달성 지원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고용영향평가 강화 및 활용도 제고) 주요 예산사업 등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확대 및 사전 고용영향평가 도입 등을 통해 예산 편성·집행에 적극 활용
  - 단위사업 중심에서 산업별·정책분야별 평가로 확대하고, 지방 자치단체 사업이 고용친화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
- ② (일자리 중심 국정운영)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일자리 컨트롤 타워로서 ‘(가칭) 국민일자리행복회의’ 정기 개최
  - \* “고용률 70% 달성”을 위해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 청사진인 「국민 일자리 행복 로드맵」 수립·추진
  - 「일자리정책조정회의」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쌍방향적 의사 소통 체계 구축, 매월 지역·산업별 경기·고용동향 점검
  - 「민관 일자리협의회」를 통해 공공 및 경제 5단체간 경제·산업 동향과 고용창출에 관한 인식 공유·협력
- ③ (고용영향평가의 인프라 강화) 체계적인 고용영향평가를 위한 고용·노동통계 기능 강화 및 관련 인프라 보강
  - \*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정밀조사 및 심층분석 등

## 가. 과제개요

- ☐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‘따뜻한 성장’ 과 ‘국민행복’ 실현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협동조합 비전 및 정책 수립) 협동조합 발전 기본계획( ‘14~’ 16년) 수립 및 기존 일자리, 복지정책과 연계성 제고 정책 과제 발굴
  - 법 시행후 실태조사를 통해 ‘협동조합 장기정책 비전’ 수립
- ② (협동조합 인프라 지원) 누구나 쉽게 협동조합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및 정책지원 강화
  - 권역별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조합설립, 인가, 감독업무 등 지원
  - 온라인 설립 신고 및 인가, 경영자료 공시 및 통계 DB구축 등을 위한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, 운영
- ③ (사회적기업 활동 지원) 사회적기업 활동범위 확대 및 인증제 개선
  -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‘사회목적 판단기준’ 보완 등 제도개선 (예: 인증제의 등록제 전환 등)
  - 인건비 직접지원은 단계적 축소, 사업개발· 판로개척 등 간접지원 확대 및 성과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
- ④ (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업 지원 강화)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제 활성화, 농어촌 지역개발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
  -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, 청년·고령자의 사회적기업 취업·창업 지원 강화(예: 청년 사회적기업 인턴제, 은퇴자 창업전문과정 개설 등)

## 추진전략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

- (11)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
- (12) 농림축산업의 신성장 동력화
- (13) 해양 신성장 동력 창출 및 체계적 해양관리
- (14) 수산의 미래 산업화
- (15) 보건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
- (16) 고령 친화산업 육성
- (17) 물류·해양·교통체계 선진화
- (18) 해외건설·플랜트 및 원전산업 진출 지원



## 가. 과제개요

- 콘텐츠(C)·플랫폼(P)·네트워크(N)·기기(D)를 아우르는 혁신적 정보통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네트워크)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ICT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세계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, 국민이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
  - 현재 보다 10배 빠른 1Gbps급 유선 인터넷을 보급하고, 무료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무선 인터넷존(Wi-Fi존) 대폭 확충
- ② (HW/SW) ICT가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ICT 중소벤처의 창업과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고, 창의적인 기술이 해외에서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해외 기술거래 유통망 확보 추진
- ③ (플랫폼) 방송통신 융합추세에 대응하여 방송법·IPTV법 통합 등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를 추진하고, 맞춤형·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한 스마트 미디어 육성으로 신규 미디어시장 창출
- ④ (콘텐츠) 게임, 음악, 애니·캐릭터, 영화, 뮤지컬 등 5대 글로벌 킬러 콘텐츠를 집중 육성하고, 창의적 아이디어를 인큐베이팅하고 공동 창작할 수 있도록 콘텐츠코리아 랩 설립 등 추진

### 가. 과제개요

- 시장개방 확대, 사회·경영환경 변화 등에 대응, 농림축산업을 신성장 동력화하여 일자리 창출 및 부가가치 제고

#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농식품의 6차산업화) 생산과 연계, 유통·가공·외식·관광 등 2·3차 산업을 활성화하여 농촌지역의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
  - 6차산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로 가공·향토산업을 육성하고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관광·체험 등 3차 산업화하여 농촌 관광·체험 활성화
- ② (농식품의 첨단산업화) 종자, 식품, 기자재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로 농식품을 최첨단산업으로 육성
  - 종자강국 도약을 위해 Golden Seed 프로젝트, 육종연구 인프라 구축 및 해외 로열티 절감 추진
- ③ (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) 분뇨문제 해결 및 생산체계 개선 등을 통한 축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추진
  - 가축분뇨 자원화, 무허가축사 개선, 시설현대화 지원, 장단기 사료가격 안정대책 및 가축질병 대응체계 강화 등 추진
- ④ (산림부국 실현) 숲 가꾸기, 목재산업 육성, 산림복지 공간 및 도시숲 확충, 산림탄소배출권 확보 등으로 산림가치 극대화

## 가. 과제개요

- 체계적 해양관리를 통해 해양주권을 강화하고, 해외 해양경제 영역 개척, 해양신산업 육성 등 신성장동력 창출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해양신산업 육성) 마리나 시설 확충 등 해양관광 기반을 확대하고, 산업연계형 R&D 지원을 통한 성과 확산 도모
  - 마리나 체험행사 확대를 통한 해양레포츠 저변을 확대하고, 마리나 시설 확충, 마리나 서비스업 육성 등 마리나 산업 활성화
  - 해양바이오, 해양에너지·플랜트, 수자원 등 해양R&D를 지속 추진하되,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
- ② (경제영토개척) 남·북극을 아우른 극지정책, 심해저 광구확보 추진
  - 남극 장보고기지 건설, 북극 항로개척 및 극지에서의 기초·응용 연구 확대 등 극지에 대한 전략적 개발·활용 추진
  - 유망 탐사개발광구 확대 및 선진국 수준의 상용화 기술개발
- ③ (해양관리) 주변국 동향에 적극 대응하고, 경계확정 지원 강화
  - 주변해역에 대한 해양관측과 조사활동을 강화하고, 해경 대형 함정 확충, 해경전진기지 개발 등 체계적인 해양관리 추진

## 가. 과제개요

- ☐ 피쉬플레이션 시대를 맞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신선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,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수산업의 미래산업화) 첨단기술 접목 및 신개념 도입으로 전 세계적 수산양식혁명을 선도하고, 외연 확대로 수산업 영역 확장
  - 유망품목에 R&D를 집중하고, 대단위 양식단지(양식섬), 먼 바다 외해양식, 도심형 빌딩양식, 갯벌양식 등 신개념 생산 시스템 확립
  - 바다생태관광·레저·스포츠 등으로 수산업의 외연 확장
- ② (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) 수산자원 증강, 적정 어선세력 유지 및 해외개발역량 강화 등으로 수산물의 지속적 공급체계 구축
  - 바다목장·바다숲·종묘방류 등 자원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에너지절감형·복지형 어선 개발·보급 및 노후어선 현대화 추진
- ③ (어항 기능 고도화) 기능 융복합, 개발방식 다변화, 시설 개보수 및 관리강화 등으로 어항의 효용성 극대화
  - 맞춤형 특화어항 개발, 민자투자 활성화, 어항안전 보장 등 추진
- ④ (수산 식품산업 육성) 인프라 강화, 제도 개편 및 지원 강화로 수산물 소비패턴을 다양화하고 수출확대에도 기여
  - 수산식품 가공·소비지물류 센터 확충, 천일염의 세계화 등 추진

### 가. 과제개요

- ☐ 창조경제 이행을 위한 핵심산업으로 헬스케어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선점,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

#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제약산업 글로벌 10대 강국 도약) ‘글로벌 제약육성 펀드’ 조성, 제약산업 해외진출 전문인력 양성, 제약산업 특성화 대학원 추가 지정, 기술투자 중심 전환을 위한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추진
- ② (첨단의료기기, 화장품 산업육성) 융복합 신의료기기 R&D 강화,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지정 및 특성화 대학원 설립, 화장품 산업 첨단 수출 산업화
- ③ (신 의료·융합서비스 발전 기반 조성) 국가 보건의료정보 표준화, 의료정보 공유보호 제도 정비, 융복합 서비스(U-health, PHR) 등 시범사업 추진
- ④ (전략적 보건의료 R&D 강화) 보건의료 R&D 기본계획 수립 및 부가가치 높은 첨단의료기술 개발 분야\* 집중 투자, 연구 중심병원 육성
 

\* 맞춤형의료, 줄기세포·재생의료, 신약·의료기기, 양한방 융합 등
- ⑤ (해외환자유치 활성화) 중증장기 환자 유치를 위한 유치채널 다양화, 복합 헬스케어 타운 조성 지원, 해외환자 유치 전문인력 양성
- ⑥ (의료수출 촉진)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펀드 조성, 의료법인 해외 투자 기반 및 병원수출 전문기관 설립·육성
- ⑦ (한의학 세계화) 국제특허·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전통지식 체계화, 한의학 해외 거점 마련 등 추진

## 가. 과제개요

- ☐ 고령화에 대응하여 건강 증진·웰빙 등 친고령산업 및 항노화 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

\* (글로벌 항노화 시장) '10년 237조→ '15년 365조원 전망  
(국내 항노화 시장) '11년 11.9조\*→ '20년 28.3조 전망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산업화 가능분야 개발) 항노화 화장품·의약품·식품, 고령자 복지형 헬스케어 융합제품·서비스, IT기반 스마트케어 기술 개발, 항노화 특화 글로벌 헬스케어 육성

- ② (친고령·항노화산업 R&D 확대) 범부처 ‘고령화 시대 고령친화 항노화 산업 Flagship프로젝트’ 추진, R&D 지원 확대\*

\* 복지수요대응(자동수욕시스템, 고령자 테크노하우스, 신체기능 대체물, 건강관리 등), 미래수요창출(인공지능 스마트신발, 고령생활지원 Health IT 시스템) 분야 지원

- ③ (융·복합 R&D 촉진 여건마련) 친고령산업 연구지원센터\* (예: World Aging Center) 건립, 관련 펀드 조성 추진 및 전문인력 양성·자격제도 도입 및 국제행사\*\* 유치 추진

\* 분야별 글로벌 시장진출 Hub화, 융복합 신기술 및 다학제적 정책개발, 인력양성 (ODA 포함), R&D, 인큐베이팅, 시장활성화 등 지원

\*\* 제3차 UN 세계고령화총회 등 정상급 국제행사 유치 ('15) 추진

- ④ (관련 법·제도 정비) ‘친고령·항노화산업 활성화 T/F’ 구성, 산업 발전 중장기 로드맵 및 항노화 산업 연구·육성 기반 마련

\* 친고령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장기요양 급여 제품 수 및 급여 대상자 확대 병행

## 가. 과제개요

- 간선·대중교통체계 개선과 물류·해운·교통 신산업 육성 등으로 교통·물류·해양 체계 및 산업 선진화
  - 기존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, 지원체계 등을 정비하여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마련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교통체계) 혼잡한 간선교통망과 도시권 철도·도로망을 개선하고 교통 수요관리 및 대중교통 체계 선진화 추진
  - 철도 병목구간을 개선하고 혼잡권역 고속도로망 확충
  - 대도시권 광역철도 및 도시내 혼잡도로 개선사업 지원 확대
    - \*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구축 추진 및 광역철도 국고지원비율 상향
  - 대중교통 노선·요금체계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합리화
- ② (해운·물류) 해운·물류산업에 지원\* 강화 및 국적 크루즈 육성, 다기능 항만클러스터 조성, 선박관리산업 육성 등 추진
  - \* 해운보증 강화, 화주-물류기업 직접연결 등 제3자 물류기업 지원 추진 등
- ③ (해양개발체계) 해양생명자원 발굴, 자원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 해양개발을 체계화하고, 심층수 이용범위 확대 등 경제적 이용확산과 연계

## 가. 과제개요

- 해외건설·플랜트, 원자력발전소 등 건설·원전산업의 해외 진출 촉진을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
  - 시장·공종 다변화, 지역별 수출전략 등 해외건설 5대강국 진입 기반을 마련하고, 발주제도 개선 등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해외건설 기반마련) 범정부적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,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패키지형 수출, 해외건설 R&D 등 추진
  - 아프리카·중남미 등 새로운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확대하고, 정부 주도로 진행된 한국형 국토·SOC 개발경험 수출 노력
  - 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한 중소기업 해외 진출 활성화
- ② (국내 건설제도 선진화) 해외건설의 토대가 되는 국내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 공사 입찰방식 및 건설기능인 처우 개선 추진
- ③ (원전플랜트 수주 확대) 국가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·추진하고, 수주활동도 적극 지원
  - 대기업이 주도하는 플랜트수출 이외에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기자재 틈새시장 진출 역량 확대
    - 원전운영, 정비, 계속운전 등 서비스·기술시장에도 적극대응
  - \* '13년 중 UAE 원전운영/정비지원계약 체결 추진
  - 미자립기술 국산화로 도입국의 기술이전 수요에 대응하고 원전 건설·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적기확보

### 추진전략 3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

---

- (19) 중소기업 성장 희망 사다리 구축
- (20) 중소·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
- (21) 창업·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
- (22) 소상공인·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
- (23) 영세 운송업 등 선진화



## 가. 과제개요

- 중소기업·중견기업 정책연계를 강화,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‘중소- 중견- 대기업’ 으로 성장하는 기업의 사다리를 복원하여 우리경제의 부흥과 일자리 창출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### 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

- (기술력 및 생산성 향상)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R&D 지원 확대, 출연연구소 예산의 중소기업 지원 쿼터제 도입, 정부 기술개발 결과물 중소기업 우선이전 법제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력을 선진국의 90%, 생산성은 대기업의 60%로 향상
- (수출 및 판로지원 확대) 중소기업 수출단계별(준비- 실행- 현지진출) 맞춤형 지원 강화, 강소기업에 대한 집중지원 프로그램 도입
  - 여성기업제품 구매의무화, 대규모 계약의 분할·분리발주 법제화, 소기업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 초기시장 제공
- (고질적인 인력난 완화) 중소기업 인력유입 및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재형저축 및 퇴직공제제도 도입, 병역특례제도 개선 등을 추진

### ② (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마련) 중소기업 졸업 후 금융·세제 등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, 가업상속 지원 강화 등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확대하여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육성

### ③ (정책실효성 제고)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을 통해 중복지원을 방지하고, 유형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 마련 및 정책홍보 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개편

## 가. 과제개요

- 수출비중이 33%에 불과한 중소·중견기업이 세계시장에 눈을 돌리도록 함으로써, 경제위기 극복, 일자리 창출 등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신성장동력으로 육성
  - ‘11년 무역 1조달러 달성, 수출 7강 진입 등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, 대기업·특정 품목 편중, 가격경쟁력 위주 수출로 성장한계 직면
    - \* 수출편중도(‘12): 주력 5대 품목(반도체, 자동차 등) 41.1%, 13대 품목 80%
  -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 우려, 선진국보다 미흡한 소재·부품산업 경쟁력, 중국 등 신흥국 추격 등으로 ‘샌드위치 경제’화
    - \* 해외생산비중 : 휴대폰 81%(‘123분기 삼성·LG 등), 자동차 51%(‘12년 현대·기아)
- 이를 위해 중소·중견기업 수출비중 제고, 품목 다변화 등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고, 지원기관별 칸막이 제거를 통해 업종기업 성장단계에 맞춘 수요대응형 수출지원체계 구축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중소·중견기업 역량별·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) 기업의 글로벌화 역량평가와 수출단계(준비-실행-현지진출)별 정책수요에 맞춘 수출지원 패키지 지원 및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지역전문가 양성
- ② (신흥시장 마케팅 지원 및 인프라 강화) 해외시장에서 문화한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결합한 국가브랜드 제고 활동 추진 및 수출지원 인프라(해외전시회, 무역관, 무역보험 등) 확충
- ③ (총력 수출지원체계 구축) 지역별 원스톱 수출지원네트워크 구축 및 대통령 주재 무역진흥전략회의 개최 등을 통해 수출애로 해소
  - \* 중소·중견기업 해외진출을 위해 KOTRA는 국내역할 강화, 중진공은 해외비 진출강화

## 가. 과제개요

- ‘창업→성장→회수→재도전’ 이 원활한 선순환 창업·벤처 생태계를 조성하여, 창조적 인재들이 도전하여 성공하는 영웅 신화를 창출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### ① 창조형 중소기업 창출

- (우수한 청년창업가 발굴·양성) 기업가정신과 창업교육 강화, 창업선도대학 확대 등을 통해 대학의 희망 창업기지화를 추진하고 벤처 천억기업 등 성공사례를 홍보하여 젊은층의 도전정신을 고취
- (투자중심 자금조달체계 마련) 청년창업펀드 신설, 크라우드 펀딩\* 및 보육·투자·기술개발을 연계 지원하여 성장시키는 ‘이스라엘식 투자시스템’ 을 도입하여 기술과 아이디어로 쉽게 자금조달 지원

\* 일반국민으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모집하여 창업에 투자

- (중간회수시장 확충 및 코스닥시장 개편) 엔젤지원형 세컨더리 펀드 확충,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, M&A 세제지원 및 코스닥시장의 기술기업 중심 개편 등을 통해 투자자금의 조기회수 통로 마련

### ② 원활한 재도전 환경 조성을 통한 실패경험의 사회적 자산화

- 실패해도 생계는 유지토록 압류재산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‘간이회생제도’ 를 도입하여 회생기간을 단축
- 실패 기업인이 과거 납부한 세금실적을 반영하여 체납된 세금의 납부유예 또는 재창업시 소득세·법인세 일부 감면 추진

## 가. 과제개요

- 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보호와 자생력 제고를 통해 경영여건을 개선하여 생업안전망 구축 및 서민경제 활성화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자영업자·소상공인의 준비된 성공창업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
  - (1단계 : 진입) 상권정보시스템\*의 상권정보 제공기능을 강화하고, 프랜차이즈협회, 소상공인 창업학교를 통해 맞춤형 특화교육 실시
    - \* 전국 1,200개 주요상권의 동종·경쟁업소, 임대시세, 유동인구 등 정보 제공
  - (2단계 : 진입 후) 사업보호와 경영역량을 강화
    -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조기 정착, 사업조정 일시정지 명령제 도입 등을 통해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억제
    - 협동조합 결성을 통한 공동구매, 지역별 유통물류센터 건립 확대 등을 통해 싸게 사서 싸게 파는 가격경쟁력 확보 지원
    - 소상공인지원공단, 소상공인기금 설치 및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정을 통해 소상공인에 종합적인 통합지원체계를 구축
  - (3단계 : 실패) 업종전환·전직교육을 강화하고, 폐업시 압류걱정 없이 생계유지·재기가 가능하도록 소상공인 공제기금 조성 확대
- ② 고객이 다시 찾는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
  - 상인조직을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, 다량엽가의 공동구매를 지원하고, 정부 비축물자 지원을 통해 가격경쟁력 확보
  - 지역 역사문화관광 등과 연계한 특성화시장 육성을 확대하고, 전통시장 인증제도 도입, 시설현대화사업 상인부담 완화 등 추진
  - 온누리상품권을 5년간 4조원을 발행하고, 지자체 공무원도 복지비의 10%(400억원)를 구매, 주차장·택배시스템·카드단말기 보급 확대

### 가. 과제개요

- 교통·운송 산업을 지원하고, 교통산업 구조를 선진화
  - 택시, 버스, 화물차, 연안여객운송 등 영세 운송업을 지원하고, 교통·운송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

#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택시지원) 택시문제의 근본요인인 ‘과잉공급’ 문제를 해소하고, 연료다변화 지원 등으로 경영수지 개선 및 경쟁력 제고
  - 택시총량 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한 감차보상과 CNG 등 차량연료 다변화를 위한 국가 지원 추진
- ② (버스산업 선진화) 정기이용권버스 등 수요응답형 서비스 도입, 광역급행버스 확대, 승차권 발매 통합전산화 등 경쟁력 강화
- ③ (화물 운송업 지원) 통행료 할인 검토 및 검사수수료 절감을 추진하고, 복지사업 및 휴게시설 확충 등 근로여건 개선
  - 표준계약 정착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
- ④ (연안여객운송사업 선진화) 도서교통 육성 법률 제정, 국가고속 해상교통망(KVX)구축, 해상교통인프라 개선 등 도서교통 육성



## 추진전략 4 창익과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

- (24)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
- (25)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
- (26)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국가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
- (27) 지식재산의 창출·보호·활용 체계 선진화



### 가. 과제개요

- ☐ 기술과 지식, 아이디어가 활발히 창출되고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·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을 제고

#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창의적 상상력이 풍부한 사회문화와 융합형 과학기술인재 양성
  - 상상·도전·창업 국민운동과 전국 과학관 무한상상실 설치 등 상상력과 아이디어의 씨앗이 퍼지도록 과학문화 활동 다변화
  - 과학기술 특성화대 융합교육 프로그램 지원, 과학고·영재고의 교육·연구 지원을 통한 과학영재 체계적 육성 등
- ② 국가R&D 투자규모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자전략 정비
  - 정부의 투자는 기초연구에 집중('17년까지 전체투자 중 40%)하고, 연계·사업화연구와 중소·중견기업R&D에 대한 지원 강화
  - 민간 R&D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, 기술규제 완화 추진
- ③ 창의적 성과 도출을 위해 R&D기획·평가 및 관리 시스템 개편
  - 최종목표와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구자가 자율 기획하는 방식을 적극 도입하고, 학술성과 중심 평가에서 기술이전 등 사업특성에 따른 다양한 가치를 평가요소로 반영
  - 정부R&D성과정보 시스템 구축과 후속연구 지원 등 성과활용 강화
- ④ 과학기술인이 신명나게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조성
  - 출연(연)별 미션 재정립과 중장기 비전수립, 출연금 지원비중 확대('14년 70%)와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한 정규직 확대 추진
  - 과기인 연금을 사학연금 수준으로 높이고, 65세 정년 환원 검토
- ⑤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획인프라 강화
  - 창조경제 구현 위해 과기기본법 범위를 혁신생태계까지 확장
  - 과기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위해 부처별 추진계획(5년) 수립

## 가. 과제개요

- 발사체, 인공위성, 달 탐사 등 최첨단 집약기술인 우주기술의 자립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국민의 삶 구현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통한 인공위성 자력발사 능력 확보
  - 1.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(600km ~ 800km)에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여 발사체 개발(당초 ‘21→ ’ 19)
  - 한국형발사체를 활용, 달 궤도선과 달 착륙선 자력발사(’ 20)
- ② 인공위성 개발로 국가안전과 대국민 서비스 강화
  - 한반도 주변의 기상, 해양, 환경, 재해재난, 자원 등 상시관측 체제를 구축하여 국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 구현
- ③ 우주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
  - 한국형발사체는 시스템 예비설계 단계부터 항공우주연구원과 기업체가 공동 추진하여 우주산업 촉진
  - 차세대 중형위성개발사업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 창출, 위성전문 기업 육성, 세계 위성체·위성영상 시장 진입 등 도모
  - 국내 위성영상 판매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위성영상 수신·활용 등 위성활용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
- ④ 우주 국제협력 강화로 우주개발 촉진 및 국가위상 제고
  - 대상국 수준과 특성을 분석하여 협력을 다변화하고, 높아진 우주개발 역량에 걸맞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
  - 관계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대형 국제공동연구 사업 등 다자간 협력 프로그램 참여 확대

## 가. 과제개요

- 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구개발특구를 연계하여 기초과학부터 첨단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과학벨트와 연구개발특구 연계로 전주기 R&D 지원 체계 구축
  - 그간 분산 추진되어온 정부지원체계를 일원화하여 기초과학에서 연구성과의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
  - 현지 전담 지원조직을 일원화하고, 과학벨트·특구 내 연구기관의 성과 발굴·확산과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
- ② 과학벨트를 과학·문화·산업이 융합되는 지식생태계로 조성
  - 기초과학연구원은 인근 대학연구소, 기업체와의 소통과 융합의 중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건립
  - 유치한 과학자와 가족을 위한 정주여건(문화·의료·교육 등) 조성
- ③ 기능지구(청원·천안·세종)의 과학-비즈니스 연계역량 강화
  - 기능지구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, 지역별 특성에 따라 거점 지구와의 연계전략을 차별화
  -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지역별 역량 육성 및 기반 마련
- ④ 기초과학연구원을 창의인재와 원천지식의 중심기관으로 육성
  - 국내 보유 역량과 국가 전략적 차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, 중장기 연구 분야 구성에 관한 계획 수립
  - 각 캠퍼스는 지역별 특성화된 기초연구 거점으로 조성

## 가. 과제개요

- ☐ 지식재산이 효율적으로 “창출-보호-활용” 될 수 있는 지식재산 (IP) 시장생태계 조기 구축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IP 가치평가 및 금융 활성화 등 지식재산 활용 극대화
  - 연구개발-표준-특허 간 삼각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장성이 큰 고부가가치 원천·표준 특허의 전략적 확보 방안을 마련
  - 지식재산서비스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(KSIC) 독자 산업 반영 등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 기반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
- ② 지식재산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 및 침해대응 강화
  - 신속·전문화된 분쟁해결을 위해 특허소송 관할제도 개선 및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
  - 디지털 포렌식 등 지재권 침해에 대한 수사기술 고도화 및 특사경 등 수사인력 전문성 제고, 기관 간 정보공유 등 협력 강화
  - 해외 지원센터 연계·확충 및 국제협력\*을 통한 침해방지 및 권리구제 지원
- ③ 중소·중견기업 지재권분쟁 대응역량 강화
  - 중소·중견기업의 지재권 관리역량 제고를 통한 선제적 분쟁예방 지원
  - 국제지재권 분쟁 단계별(평시-경고-대응) 범정부적 맞춤형 지원체계 운영
- ④ 정당한 지식재산 보상체계 확립 및 국민인식 제고
  - 기업·대학·연구기관 등의 종업원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혁신과 창의 촉진

## 추진전략 5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

- (28)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
- (29) 소비자 권익보호
- (30)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선
- (31) 대기업 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
- (32) 기업지배구조 개선
- (33)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



## 가. 과제개요

- ☐ 대기업의 경제력 우위를 남용한 각종 불공정행위와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사업영역 침범으로부터 경제적 약자를 보호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유통분야 제도 개선과 불합리한 거래관행 조사·제재
  - 납품업체로부터 징수하는 복잡다단한 판매장려금 항목 정비·개선
  - 판촉사원 파견의 요건을 명시한 가이드라인 제정·보급
  - 각종 비용의 합리적 부담기준 제시를 위한 표준계약서 개정 추진
- ② 가맹점주 권리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실태조사 등 강화
  - 가맹본부의 매장 리뉴얼 강요금지와 리뉴얼 비용분담(최대 40%)
  - 가맹점주의 단체 결성·가입에 대한 가맹본부의 불이익 부과 금지
- ③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피해 방지
  - 「하도급법」에 부당한 특약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 신설
  - 중기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 부여 방안을 추진
- ④ 대·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문화 확산
  - 1차 협력사와 2·3차 협력사의 공정거래협약 체결 유도·확산
  - \* 1차 협력사와 2·3차 협력사간 거래내용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
  - \* 2·3차 협력사까지 현금결제가 이루어지도록 유도
- ⑤ 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 및 적합업종 관련 사업조정의 실효성 제고
  - 생계형 서비스업의 적합업종 조속 지정 및 지정범위 확대
  - 적합업종 사업조정을 2개월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는 신속사업조정제 도입

## 가. 과제개요

□ 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와 불공정행위 규율을 통해 소비자 권익증진과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 유도

- \*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지원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
- \* 금융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정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
- \* 서민생활 밀접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적극 적발·제재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① 소비자 역량강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

○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

- \* 매월 1~2개 품목의 가격과 품질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정보 제공
- \* 유통 채널별·단계별 가격정보, 소비자의 실제 구매경험에 기초한 상품정보 제공

○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제 도입

○ 소비자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비자보호기금을 설립하여 운영

②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

○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 제정안의 조속처리 추진

○ 신용조회회사가 희망자에게 개인 신용등급 변동사항 통지 서비스 제공

③ 서민생활 밀접분야 담합 등 불공정행위 시정

○ 생필품, 금융, 교육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 모니터링 지속 실시

○ 재정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 및 제재 강화

- \*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입찰상황판 등 정보 수집 채널 정비

## 가. 과제개요

### □ 법 위반 억지 및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위해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체계 대폭 개선

- \* 소액다수 피해가 큰 위법행위 유형에 대해 집단소송제 도입
- \* 악의적이고 피해정도가 큰 위법행위 유형에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
- \* 위법행위의 직접 금지(중지)를 법원에 청구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
- \*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'고발요청권자'를 중기청장·감사원장·조달청장으로 확대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### ① (징벌적손해배상제) 하도급법 상 '부당단가인하, 부당한 발주 취소, 부당반품'에 우선 도입하고, 점차 도입범위 확대 추진

- \* 현행 「하도급법」 규정 및 외국 사례를 고려, 징벌적 배상금액 상한을 3배로 규정

### ② (집단소송제) 공정거래법상 담합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도입

- 판결의 효력범위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제외신청을 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'Opt-out(제외신청형) 방식' 추진

- \*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“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”의 자격요건 및 허가요건 등 완화(법원의 변호사 보수 감액권한, 집단소송 대리횟수 제한 등)

### ③ (사인의 금지청구제) 「공정거래법」 위반행위 전체에 대해 도입

- 종국적인 금지명령 이외에도 예방적 금지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

- \* 남소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권한을 규정

### ④ (전속고발제 폐지) 「공정거래법」 및 「하도급법」 위반에 대한 고발 요청권한을 중소기업청장, 감사원장, 조달청장에게도 부여

- \* 해당 기관이 고발 요청할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고발

## 가. 과제개요

- ☐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일감몰아주기 등 불법 사익편취행위를 규율하고 부당이익을 환수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### ①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보완강화

-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금지규정 추가 신설
  - \*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규제를 위해 「공정거래법(제3장)」에 규정 신설
  - \* 이익을 본 총수일가에게도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여 부당이득 환수
- 현행 부당지원금지 규정 강화
  - \* 부당지원행위의 위법성 성립요건을 현행 ‘현저히 유리한 조건’에서 ‘현저히’를 삭제하거나 ‘상당히’로 완화
  - \* 수혜자에게도 부당지원을 받지 않을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시 제재
  - \* 부당지원의 한 유형으로 통행세 관행을 신설하여 제재
- 대기업집단 현황공시가 사익추구에 대한 경보장치로 작동되도록 개선
  - \* 비상장계열사의 총수일가 지분율, 영위업종, 내부거래비중 추이 등을 분기별로 공시

### ② 지배주주 등의 횡령, 사면권 상신,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

- 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」상 횡령 등에 대한 형량 강화
  - \* 대형 경제비리 사건에서 검찰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 선고시 원칙적으로 항소
- 「사면심사위원회」등을 통해 대기업 지배주주·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하여 사면권을 엄격하게 상신(13~17년 지속 시행)
- 회계부정행위 등 기업비리에 대한 처벌 강화(구형 및 항소기준 상향)
  - \* 회계부정사건에서 검찰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

## 가. 과제개요

- ☐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·강화의 원인이 되는 소유·지배구조의 투명성·책임성을 제고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대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 조항 신설
  - 기존 순환출자고리 강화를 위한 추가출자도 신규순환출자로 간주하여 금지
  - 기존 순환출자의 자발적·점진적 해소 유도를 위해 공시의무 부과
- ② 대기업집단 지배시스템 개선
  - 감사위원을 맡을 사외이사는 다른 이사와 분리·선출하는 방안 마련
  - 집중투표·전자투표를 의무화하되, 일정 상장사부터 우선 실시
  - 「금융회사지배구조법」 제정을 통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
- ③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
  -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를 개선하고, 대표소송제기권 등 주주권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사
- ④ 금산분리 강화
  -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, 일정요건 충족시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
  - 금융보험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
    - \*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실태를 기업집단현황 공시항목에 추가하는 방안 추진
  -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축소를 위한 「은행법」 등 개정

## 가. 과제개요

- ☐ 금융부문의 규제·감독체계를 개선하여 금융시장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상호금융) “상호금융정책협의회\*”를 통해 관계기관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, 각 중앙회의 조합감독 업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‘동일기능에 대한 동일규제’ 원칙 확립

\* 금융위(원), 농식품부(수협), 행안부(새마을금고) 등 참여('13년 1월 기발족)

- ② (유사보험) 우체국, 새마을금고, 수협, 신협 보험부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민영보험사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도록 관련법규 개정(한미FTA 협정사항)

- ③ (펀드) 자본시장법 적용이 일부 배제·완화되고 있는 개별법 (14개)상 펀드에 대해서도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 추진

- ④ (우체국 예금) 우체국과 민간금융회사간의 불공정경쟁\*으로 인해 우체국으로의 예금 쏠림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·추진

\* 우체국금융은 지급준비금·예보료·법인세 면제, 예금 전액보장 등 영업조건이 민간 금융회사보다 유리

## 추진전략 6    성장을 뒷받침 하는 경제운영

- (34)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경제의 안전판 강화
- (35)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 대응
- (36) 부동산 시장 안정화
- (37)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
- (38) 안정적 식량수급 체계 구축
- (39)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
- (40) 건전 재정기조 정착
- (41) 공공부문 부채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



### 가. 과제개요

- 대외부문의 충격에 대한 우리경제의 대응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창조경제의 기반 구축
- 글로벌 금융·재정위기가 상시화된 상황에서 대외 충격이 국내 경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·효과적으로 차단할 필요

#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) 외국인 증권투자 등 해외 자본의 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
  - \* 해외자본 유출입 확대는 국내 금융·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야기하고 대외 건전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
  -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선물환포지션, 외환건전성부담금 등 기존제도의 효율, 부과방식 및 부과상품 조정
- ② (외채·외화유동성 관리) 외채의 만기·총량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, 외환보유고 등 공공·민간부문의 외화유동성을 적정수준으로 유지
  - 외채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, “국내(domestic)-동아시아(regional)-글로벌(global)” 3단계 금융안전망 강화
- ③ (외환건전성 제고) 외환·금융시장의 주요 참여자인 금융기관의 대외 리스크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은행 등의 외환건전성 제고
- ④ (국가신용등급 관리)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에 대한 척도인 국가신용등급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

## 가. 과제개요

- 글로벌 재정위기 및 국내외 경기둔화 지속 등 경제·금융 여건불안에 대응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도모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가계부채 연착륙) 가계부채 규모, 증가속도, 대출구조 관리\* 등 그동안 누적된 가계부채문제가 연착륙되도록 정책적 노력 경주
  - \*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(일시상환, 변동금리, 거치식 → 분할상환, 고정금리, 비거치식)을 당초 목표('16년말까지 30%비중)대로 차질없이 추진
  - 상호금융, 보험사 등 가계대출 규모가 큰 제2금융권의 대출 증가속도와 건전성을 면밀히 점검
  - 금융권 자체적으로 채무조정 등을 통해 차주의 상환부담 경감 노력을 지원하도록 유도
- ② (회사채시장 원활화) 취약업종 및 비우량등급 회사채 시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, 회사채 발행 인프라관련 전반적인 제도개선도 추진
- ③ (상호금융·저축은행 건전한 발전) 상호금융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, 저축은행의 건전경영 유도를 통한 신뢰회복
  - 조기경보시스템(EWS, Early Warning System)을 통해 수신급증 등 '중점관리조합'에 대한 관리 강화(금감원이 중앙회 직접 검사 등)
  -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해서도 직접 검사를 실시하고, 편법적 우회대출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등 건전경영을 위한 기반 마련

## 가. 과제개요

- ☐ 집값 하락, 주택거래 위축 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실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택·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진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\*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범 정부 대책을 마련중

### ① 부동산규제 정상화

-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여 부동산 시장 정상화 추진

### ② 주택수급 조정

- 공공주택 공급은 임대주택 위주로 전환하고, 분양주택 공급은 주택시장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
- 주택시장 매물을 흡수하고, 부족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

### ③ 주택 수요 및 거래 회복

- 하우스·렌트푸어 대책을 적극 실시하여 한계선상의 서민·중산층을 보호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추진

### 가. 과제개요

- 물가안정기조가 구조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여 서민생활 안정 기반 마련
- 물가의 거품을 제거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차단하여 선진국 수준의 2%대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

#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농산물 유통구조개선) 유통단계 축소, 유통경로간 경쟁촉진, 유통체계 효율화 등을 통해 구조적 수급안정 기반 마련\*
  - \* (유통단계 축소) 직거래 · 사이버거래 · 소비자참여형 거래 활성화  
(경쟁촉진) 농협계통 출하 및 판매 확대  
(유통체계 효율화) 도매시장 거래제도 다양화, 물류효율화, 비축확대
- ② (석유·통신시장 경쟁촉진) 알뜰주유소 확대, 혼합판매와 유류 공동구매 활성화, 전자상거래 시장 정착 등 석유시장 경쟁촉진
  - 알뜰폰서비스 활성화,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 유도 등을 통해 통신요금 경쟁촉진 및 단말기 가격인하 유도
- ③ (공공요금 투명성 제고)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과 원가정보 공개 체계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원가검증 시스템 구축을 통해 요금 투명성 제고
- ④ (정보공개 확대) 옥외가격표시제 단계적 확대, 가격·품질 비교 정보 공개 강화, 소비자단체의 원가 분석 기능 보강

## 가. 과제개요

- 국내 생산기반 확대를 통해 자급률을 제고하고 식량위기 사전 대응시스템을 확립하는 한편, 자주율 개념을 도입하여 해외 개발·비축 등 안정적 해외공급기반 구축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위기상황별 대응 모델) 식량안보 모니터링 강화 및 조기경보 시스템 등을 통해 식량위기 사전대응 시스템 마련
- ② (우량농지 확보 및 농지 활용율 제고) 식량작물 재배에 필요한 우량농지를 최대한 보전하고, 겨울철 이모작 가능한 논을 대상으로 밀, 보리, 사료작물 등 재배 유도
  - 농지매입비축사업 및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,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 조정 등 추진
- ③ (곡물 수급불안 대응) 주요 곡물의 자주율 목표 설정 및 국내·외 비축 확대
  - 밀, 콩,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자주율 목표치를 설정하고 국내 공공비축 대상을 현행 쌀에서 밀, 콩 등으로 확대
- ④ (해외에서 적기·적량 공급) 해외농업개발 투자 촉진, 국가곡물 조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해외 곡물확보 및 도입 역량 강화
- ⑤ (수산물 확보) 연근해어업 자원관리형 감척, 해외어장 개척 등을 통해 수산물 생산능력을 높이고, 비축확대 등으로 수급 관리 강화

### 가. 과제개요

- 중산·서민층 지원과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한 재정지출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공약이행 소요재원을 차질없이 마련하기 위하여 세입기반 확충

#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비과세·감면제도 정비)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대로 종료
  - 꼭 필요한 경우에는 까다롭게 검토해서 도입
  - 일몰을 대비할 수 있도록 일몰종료를 사전에 충분히 홍보
- ② (금융소득과세 정상화) 과세형평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금융소득과세 정상화
  -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(4천 → 2천만원)
  -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
  - 비과세·감면 금융상품의 조세지원 한도 신설
- ③ (합리적 세부담 수준 결정) ‘13년 중 조세개혁추진위원회, 국민대타협위원회 논의를 거쳐 세입확충의 폭·방법에 대한 합의 도출

## 가. 과제개요

- 낭비성 예산의 제거, 비효율적인 세출의 구조조정 및 투명한 나라살림으로 국민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공약추진에 필요한 자원 확보에도 기여
- 나아가 재정수지, 국가채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여 확고한 건전재정 기조의 정착 및 재정의 중장기 지속 가능성 확보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예산낭비 최소화 및 재정평가 활성화) 예산낭비의 사전예방과 공공사업에 대한 조사·관리·평가 활성화로 지출 효율화 도모
  - 예비타당성조사, 재정사업 성과평가, 민투 적격조사,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재정/공공사업 투자관리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 기능 통합
- ② (세출구조조정) 재원마련 및 효율적인 세출구조를 위해 제로 베이스에서 강력하고도 체계적인 세출구조조정을 추진
  - ‘재정구조개편추진위원회(가칭)’를 구성하여 경제분야 재량 지출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의무지출에 대한 효율화 추진
- ③ (중장기 재정운용 목표 제시 및 관리) ‘13~ ‘17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을 통해 중장기 재정운용 목표를 제시\*하고 건전 기조 견지
  - \* 향후 5년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관리 목표 제시
- ④ (재정위험 모니터링체제 마련 운영) 국가부채로 전이될 수 있는 잠재·우발적 재정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위험요인에 선제 대응
  - 재정위험 요인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핵심지표별 임계치와 가중치를 검토하여 통합 재정위험지수를 마련·활용

## 가. 과제개요

- 향후 복지지출 증가 가능성, 공기업 부채 수준 등을 감안하여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 관리체계 마련
  - 이와 함께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국유재산 관리 패러다임 변화 (유지·보존 중심→개발·활용 중심) 등 정책환경에 부응하여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)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분류·공개·관리
  - 최근 IMF가 공표한 ‘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(‘12.6월)’을 토대로 공공부문 부채를 작성하여 공개
  - 국·공채, 연금충당부채, 보증채무, 공기업 부채 등 부채 항목별로 차별화된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방안 마련
  - 특히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실효성 제고
- ② (국유재산 관리의 효율화) 국유재산관리업무의 전문성·효율성 제고를 통해 재정수입 확보
  - 통합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유관 시스템 및 DB를 상호 연계하고 새로운 IT기술을 활용하는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
  - 국유재산 양여시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의무화, 국유재산 특례 일몰제 도입 추진 등 국유재산 유상사용원칙을 대폭 강화
  -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 추진 등을 통해 국유지의 적극적 개발 및 매각 활성화 추진

## 국정목표 2

### - 맞춤형 고용·복지

|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|
| 추진전략 7 .....       | 69 |
|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    |    |
| 추진전략 8 .....       | 81 |
|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  |    |
| 추진전략 9 .....       | 87 |
|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    |    |
| 추진전략 10 .....      | 99 |
|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|    |



## 추진전략 7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

- (42)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
- (43) 국민중심의 복지 전달체계 개선
- (44) 건강한 가정 만들기
- (45)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
- (46)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
- (47)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
- (48)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
- (49)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
- (50) 다문화 가족 적응 지원강화
- (51)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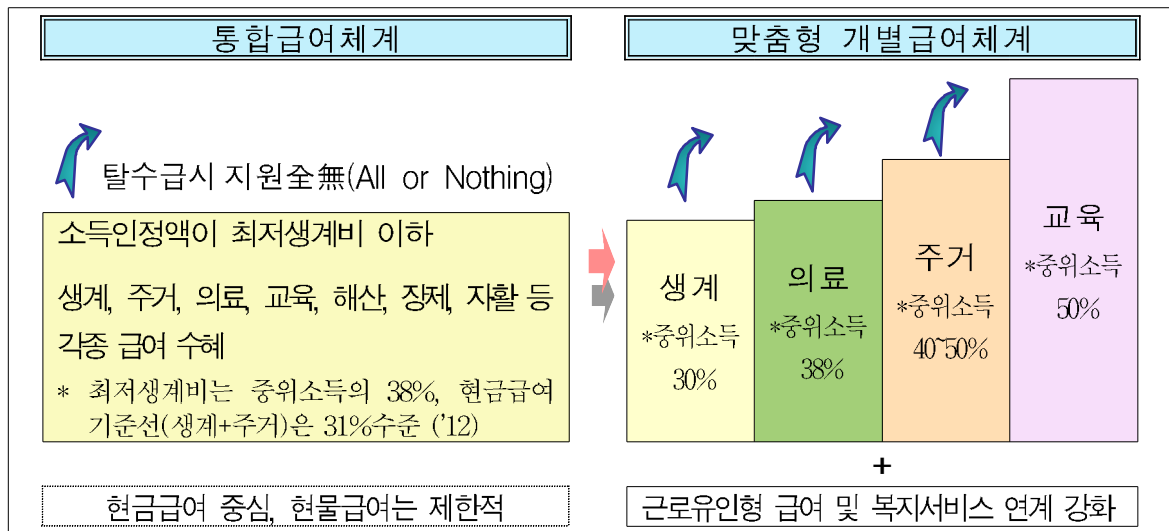


## 가. 과제개요

- 저소득층 지원체계를 수요자 관점에서 맞춤형으로 개편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빈곤예방정책 강화) 차상위 기준을 중위소득 50% 이하로 상향하고 부처별 지원 및 긴급복지지원을 확대, 중산층 도약 기반 마련
- ② (맞춤형 개별급여체계 도입) 생계, 주거, 교육, 의료급여별로 선정 기준 및 지원내용 차별화, 분야별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·조정·통합



## &lt; 분야별 지원프로그램 연계·조정·통합 방안 &gt;

- ▶ (주거) 주거바우처 도입, 저소득 민간임차가구 임대료 지원
- ▶ (교육) 교육급여를 학비·급식비·방과 후 지원 등 교육복지지원사업으로 통합
- ▶ (에너지) 에너지 바우처 도입, 혹한·혹서기 에너지 지원, 지원사업 통합 강구
- ▶ (통신) 급여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통신비 지원방안 검토
- ▶ (문화) 통합형 여가바우처를 도입, 저소득층 문화향수 기회 확대

- ③ (사각지대 완화)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, 재산의 소득 환산제 합리화

## 가. 과제개요

- ☐ 수요자 관점의 복지전달체계 구축으로 복지체감도 향상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사회보장위원회 중심의 복지거버넌스) 신설·변경되는 모든 사회보장 제도 사전 점검, 유사중복 조정, 평가, 재정통계 관리기반 구축 등
- ② (주민센터 복지허브화) 주민센터를 복지서비스 허브기관으로 단계적 개편 및 복지직 공무원·서비스 전문인력 확충
  - 주민센터 개편 前단계로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고용·복지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시군구에 (가칭) ‘내일행복지원단’ 우선 설치 (’ 13)
  - 지역주민 접근성·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과 내일 행복지원단 등의 기능을 주민센터에서 수행 가능하도록 전환 (’ 14)
    - 맞춤형 급여·서비스 신청, 통합사례관리, 고용·복지 연계서비스, 사회적 경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지원
    - 효과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市·區 주민센터는 ① 거점형 ② 기능보강형 ③ 통합형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선택적 전환이 가능하도록 모형 개발·제공
    - 郡 지역은 희망복지지원단을 보강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강화
  - 주민센터 개편 선도 지자체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우선 배치 등 원활한 기능개편을 지원
- ③ (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) 복지사업 기준을 표준화하고 사회보장정보 통합·연계시스템 구축 및 정보 공동활용 강화
- ④ (민간자원 활성화)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, 공공과 민간의 복지자원 총량 파악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 강화, 나눔 확산추진

## 가. 과제개요

- ☐ 가족가치 확산 및 가족위기에 대한 개입을 통해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기능 회복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가족가치 확산) 자녀 및 부부간 가족갈등 해소를 위한 가족상담서비스 제공 및 가족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‘행복가족 프로그램’ 운영, ‘자살과 이혼 반으로 줄이기’ 캠페인 전개
- ② (생애주기별 부모교육 확대)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보육시설·유치원, 초·중등학교, 청소년상담센터 등과 연계하여 부모교육 실시, 공공기관·가족친화기업 등 직장교육에 아버지 교육과정 개설 및 부모교육 강사 양성
- ③ (가족해체 등 위기가족 지원 강화) 가정법원, 지방법원과 연계하여 이혼신청 가족대상 가족기능 회복 지원 및 양육비 지급 이행 효율화를 위해 이행강제기관 설치 및 법률서비스 제공
- ④ (취약가족의 가족기능 회복 및 자립 강화)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인상, 한부모 가족과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복지지원 시스템 일원화 및 한부모 가족 공동주거시설 확대
  - 아이돌보미, 방과후 프로그램과 같은 무료 지원 등의 조손가족 통합지원 서비스 확대

## 가. 과제개요

-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로 청소년의 역량 개발 및 학업중단, 인터넷중독 등 위기청소년에게 맞춤형 상담·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도모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) 청소년 체험활동 접근성 강화를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, 프로그램 확대 및 지도사 배치 등으로 자기주도적인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
- ② (청소년 위기 예방 프로그램 확대 및 인프라 구축)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(CYS-Net), 청소년 쉼터, 상설인터넷 치유학교 등 위기청소년 상담·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및 인프라 구축
- ③ (청소년·가족서비스 연계모형 개발 및 시범운영) 복합적이고 연관성이 높은 청소년과 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청소년 수련관에 청소년·가족통합지원서비스 제공
- ④ (청소년정책의 실효성 강화) 범부처 차원의 청소년정책 전반을 심의·조정할 수 있도록 「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」의 기능 강화 및 청소년정책 분석·평가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

## 가. 과제개요

- ☐ 노후소득보장제도 정비 및 일자리 지원 확대를 통해 노인 빈곤율('11, 45.1%) 완화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국민행복연금 도입) 1인 1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 도입

\* 정부 출범 즉시 「국민행복연금위원회」를 구성,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구체적 방안 마련

## &lt; 도입방안 &gt;

| 국민<br>연금 | 현행 유지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기초<br>연금 | 대상자      | 65세 이상 노인 전체(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예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연금액      | (소득하위 70%)<br>무연금자 20만원 (A값 10%)<br>국민연금 수급자 14~20만원 (A값 0~3% 중복 조정)<br>(소득상위 30%)<br>무연금자 약4만원 (A값 2%)<br>국민연금 수급자 4~10만원 (A값 0~3% 중복 조정)<br>※ 부부가구는 상기 기초연금액에서 각각 20% 감액 |
|          | 시행<br>시기 | '14.7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중복조정으로 기존 가입자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복조정 하한선 설정

- ② (어르신 일자리 확대) 연간 5만개 어르신 일자리를 확충하고 일자리 참여 보수와 기간을 단계적으로 확대

\* 보수 : 월 20만원 ⇒ 월 30~40만원, 기간: 7개월 ⇒ 10~12개월

- ③ (생애설계 교육 강화) 중년기 이후 체계적 생애설계가 가능하도록 '노후설계지원법'을 제정하고 대학 등과 연계한 생애설계 교육 시행

### 가. 과제개요

- ☐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의료체계 효율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

#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4대 중증질환 급여화) 암, 심장·뇌혈관·희귀난치성 질환 등 환자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 적용 ('16, 100%)
  - 나머지 고부담 중증질환의 단계적 급여화하고 상급병실료, 선택진료비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실질적 환자 부담완화대책 추진
- ② (어르신 임플란트 급여적용)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( '14: 75세 → '15: 70세 → '16: 65세)
  - \* 현재 75세 이상 노인들만 보험급여 적용 연령도 임플란트 사업과 동일하게 하향조정
- ③ (본인부담 상한제 개선) 현행 3단계인 상한제를 세분화(7단계)하되,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(200만원→120만원), 고소득자는 상한액을 높이도록(400만원→500만원) 조정
- ④ (실직자 보험료 부담 완화) 임의계속 가입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
- ⑤ (보험료 부과체계 개선) 소득 중심 부과체제로 단계적 개편
- ⑥ (수가 및 지불제도 개선) 취약지, 필수의료분야 등에 대한 효과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획일적 수가 및 가산체계를 개편하고 행위별 수가제 보완 및 약가제도 합리화 추진
- ⑦ (국가치매 관리체계 확립) 장기요양보험의 치매특별등급 신설 검토 및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
- ⑧ (독거노인 돌봄 강화)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, 老老 케어 확대 등 다양한 사회적 지원 체계 동원으로 독거노인의 돌봄 부담 해소

### 가. 과제개요

- ☐ 고령화,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, 의료서비스 체계를 예방에서 임종까지 수요자 관점으로 개편

#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예방·건강관리) 담배·술 규제 강화, 생애주기별 맞춤 검진체계 개편, 4대 중독(알코올, 마약, 도박, 인터넷) 대응체계 구축, 보건소 건강증진 허브화를 통해 예방적 건강관리 기반 마련

- ② (의료공급체계 효율화) 동네의원-병원-대형병원간 기능 재정립\* 추진,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에 대해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“혁신형 건강플랫폼” \*\* 모델 확산

\* 일차의료 활성화, 전문병원/지역거점병원 육성, 연구중심병원 지원 등

\*\* 병의원, 보건소, 체육시설, 공공기관, 기업체 등 공공·민간을 아우르는 지역사회 자원이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 영역·제도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하는 혁신모형

- ③ (응급의료) 자동제세동기 보급 확대,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, 응급의료전용헬기 확충, 응급의료기관 기능개편, 중증외상센터 지역균형 배치 등 추진

- ④ (공공의료) 지역간 의료이용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기본 계획 수립 및 기초→지역→권역별로 체계적 의료 공급 기반 구축

\* (기초) 농어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육성, (지역) 지역거점병원 지정·육성 (권역) 중증질환 치료가 가능한 권역거점의료기관 육성 및 협력체계 구축

- ⑤ (노인의료) 회복병원 체계 강화, ‘의료+요양+생활 통합서비스’ 활성화, 호스피스·가정간호 등 노인의료체계 확충

- ⑥ (인프라) 의료인력, 병상 등 의료자원의 합리적 수급 관리 도모, 고령화 등 미래 환경에 맞는 의료인력 양성시스템 개편

\* 의료취약지 근무인력 및 일차의료인력 양성, 의사수련과정개편, 간호인력체계 개편 등

### 가. 과제개요

- ☐ 장애인 삶 전반에 걸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

#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장애인권리보장 강화)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검토 및 개인 욕구, 사회·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장애판정체계로 단계적 개선
- ② (중증장애인 보호)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및 급여 확대, 응급안전시스템, 단기 및 주·야간보호 서비스, 그룹홈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
- ③ (발달장애인법 제정) 발달장애인 실태 등 고려, 단계적 입법 추진
- ④ (장애인연금 급여 인상대상 확대) 기초연금 개편 방향에 맞춰 시행
- ⑤ (공공의료 강화) 권역재활병원·재활중심 거점 보건소 중심의 공공 재활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및 재활건강증진 프로그램 보급
- ⑥ (이동권 증진)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확충
- ⑦ (주거권 보장) 주택개조시 기금 융자,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주거약자용 주택건설 비율 확대, 장애물 없는 주택설계 확대 등 검토
- ⑧ (정보격차 해소)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, 장애유형별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보급, 사랑의 그린PC 무료 보급, IT 교육 등 추진
- ⑨ (고용의무 이행) 장애인 고용우수 기업 인증마크제 도입 및 인센티브 부여, 저조기업 명단 공표,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확대,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
- ⑩ (청각장애인 지원) ‘한국수화언어기본법 및 농문화지원법’ 제정 검토 및 법제화,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정, 특수교육교원 수화 연수, 교수학습자료 개발
- ⑪ (장애학생 교육지원) 특수학교 산증설, 특수교사 정원확보율 제고, 전공과 학급 확대,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확대 및 지원 사업 대학의무운영 추진

## 가. 과제개요

- 초기 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응지원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들의 정착단계와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확대하여 원활한 사회통합과 결혼이민자들의 행복한 가정생활 유도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### ① 정착단계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

- 결혼이민자 입국전 사전교육 강화, 입국후 초기적응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 파견, 결혼이민자간 멘토링 연계 및 종합 정보 콜센터 운영

### ②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지원

-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지원, 자녀세대의 특성화를 위한 ‘아시아 브릿지’ 인재양성 및 이주배경 청소년의 한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적응프로그램 운영

### ③ 일반국민의 다문화인식 제고

- 다문화 이해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대상별 다문화이해교육 확대

### ④ 부처 간 유사·중복 사업 조정 강화 등

- 총리실의 관련 부처간 유사·중복사업 상시 조정기능 강화 및 정책 발굴 등을 위해 전문가-학계-시민사회-기업 등이 참여하는 ‘다문화가족 포럼’ 운영 활성화

### ⑤ 기금 설치 등을 통한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

- 국내 거주 외국인의 사회통합과 외국인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재원마련 방법으로 기금 운용 추진

## 가. 과제개요

-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, 생활여건 개선 등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어촌 만들기
- 농어촌 지역의 자생적 발전역량을 키우고, 자구노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하여 긍정적 분위기 조성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복지) 농어촌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충
  - 산재보험 수준의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 도입,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소득 상향조정을 통한 지원 확대 및 공동생활홈 조성과 마을리모델링 추진
- ② (생활여건) 주거·의료·교육 등 도시 수준으로 정주여건 개선
  - 마을회관에 공동급식시설 설치 및 가사도우미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촌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 확충 및 도시가스배관 확대
  - 지속가능한 농어촌 학교시스템 구축 및 농어촌지역 고교 출신자에 대한 지원 확대
- ③ (농어촌 주민 주도 지역개발) ‘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’ 함께 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 ‘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대 발전
  - ‘17년까지 색깔있는 마을\* 5,000개를 육성, 전체 농어촌 마을로 확산하고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위해 ‘농어촌마을 리모델링 특별법’ 등 관련법령 제·개정
  - \* 주민주도로 유무형의 마을자원을 활용, 소득원 창출 및 마을 정비, 주민과 도시민이 함께하는 거주·체험·여가·치유 공간으로 발전된 마을

## 추진전략 8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

- (52)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
- (53)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망 강화
- (54)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
- (55)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



## 가. 과제개요

- ☐ 근로장려세제-사회보험료 지원-자산형성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일하는 것이 유리한 급여체제로 개편,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)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, 소득기준 (중위소득 50% 수준), 점증구간점증률 확대를 통해 최대급여액 인상
  - 급여체계 개편과 연계,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장려세제 전면 적용
  - 생계급여 수급 의존보다 취업 후 근로장려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, 주거, 교육 등 맞춤형 급여를 받는 것이 유리하도록 연계
  -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의 단계적 확대 및 EITC 지원 연계 추진
  - 자산형성 지원을 취·창업 수급자에서 자활참여자, 차상위까지 확대
- ② 맞춤형 고용·복지서비스 연계 강화
  - 근로능력 있는 빈곤계층은 우선적으로 고용센터(취업성공패키지)에 의뢰하여 일반노동시장 취업 지원
  - 개인·가구여건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는 특화프로그램 (희망리본, 자활센터 등)에서 집중관리로 재도전을 도모
    - \* 사회복지통합관리망(복지부)과 일모아시스템(고용부) 연계
  - 복지·일자리 통합 지원을 위해 시군구에 ‘내일행복지원단’ 설치·운영
  - 지역자활센터는 밀착사례관리기관,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등으로 단계적 전환 지원
  - 근로빈곤층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고용센터 인력·인프라 확충 추진
  - (가칭) ‘빈곤예방 및 탈출을 위한 저소득층 자립지원법’ 제정 추진

## 가. 과제개요

- 구인-구직자 매칭 시스템 구축,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등 촘촘한 고용서비스 제공을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및 고용률 제고 지원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강화) 「구직등록-취업애로요인 진단-맞춤형 직업훈련-취업알선」에 이르는 생애주기별·단계별 맞춤형 패키지사업의 개선·확대
- ② (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) 청년·중장년·여성·근로빈곤층·장애인·제대군인 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
  - ▲ (청년) 스펙초월 채용시스템, 청년 NEET대상 맞춤형 취업지원패키지 강화 등
  - ▲ (중장년)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, 전직지원서비스 강화 등
  - ▲ (여성) 반듯한 시간제일자리 지원 강화,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강화 등
  - ▲ (근로빈곤층) 고용·복지 연계 맞춤형패키지 서비스 제공 등
  - ▲ (제대군인, 퇴직경찰 등) 취업특강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, 취업캠프 등
- ③ (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강화)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요자 맞춤형 패키지사업 중심으로 재구조화
  - \*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간 통합·패키지화, 고용서비스·직업훈련의 비중 확대
- ④ (고용서비스망 연계 강화) 워크넷을 「일자리종합정보망」으로 구축하여 공공·민간간 일자리 정보망 연계 등 정보 공유 확대
  - \*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자치단체, 각 부처 민간위탁기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
- ⑤ (민간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활성화) 우수한 민간 직업소개소, 직업훈련기관 등을 육성하고 역량 강화를 지원

## 가. 과제개요

- ☐ 복지 일자리 확충처우개선을 통해 우수인력 유입 및 서비스 질 제고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### ① 민간·공공 사회복지 인력 확충

- (민간)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및 근로 실태조사를 토대로 인력 배치 확대 추진
  - \* 생활시설 3교대 근무, 각 사회복지시설 인력 배치기준 조정 등
- (공공) 개별급여전환, 주민센터 개편과 연계,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 추진

### ② 사회복지무요원의 사회복지분야 우선배치 확대

- 사회복지무요원의 심화직무교육 확대 추진 병행

### ③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인상 등 근로여건 개선

- 국고보조시설(지역자활센터, 지역아동센터 등) 운영비 인상, 지방 이양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상향조정
- 장기근속자 포상, 각종 복지혜택\* 마련하여 사기 진작
  - \*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운영비 지원, 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 포함

### ④ 돌봄 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

- 4대 돌봄 바우처 사업\* 중심으로 서비스 유형 및 임금체계 표준안 검토 및 방안 마련
  - \* 가사간병, 노인돌봄종합, 장애인활동지원,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
- (가칭) 「사회서비스 사업지원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정 추진
- ‘사회서비스 수요·공급 실태조사’ 및 ‘사회서비스 산업 특수분류’ 신설

## 가. 과제개요

- ☐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대, 사회서비스 산업화 기반 강화를 통한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범부처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
  - 돌봄, 건강관리, 상담, 역량개발 등 국민욕구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사회서비스 분야 발굴
  - 노인, 장애인 저소득층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참여형 직접 지원 일자리 확충
- ② 사회서비스 산업화 기반 및 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
  -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신설, 공급 현황 파악 및 지원 근거 마련
  - 사회서비스 R&D 예산 투자 확대
  - 소셜벤처 창업 및 사회서비스업 규모화, 전문화를 위해 세제·금융·공동홍보·컨설팅 등 지원 확대
  -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협동조합, 사회적 기업 참여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
- ③ 사회서비스 재정지원 및 제공방식 효율화
  - 지역 중심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한 사회서비스 포괄보조 확대
- ④ 고부가 사회서비스 전문 인력 육성 및 체계적 관리
  - 고부가 사회서비스 필요 인력수급 전망 및 전문인력 관리 추진
- ⑤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 종사여건 개선
  - 「가사사용인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」 제정, 자율개선 지원

## 추진전략 9

##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

- (56) 주거안정 대책 강화
- (57) 서민 금융부담 완화
- (58) 교육비 부담 경감
- (59) 통신비 부담 낮추기
- (60) 농어가 소득 증대
- (61)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
- (62)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
- (63) 장시간 근로개선 및 정년연장으로 함께 일하기
- (64) 경기변동 대비 고용안정 노력 및 지원 강화



## 가. 과제개요

- ☐ 과도한 대출상환 및 전월세 급등으로 고통받는 서민·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,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하우스 푸어) 주택을 보유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방안 추진
  - 주택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해당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계속 거주하는 「주택지분 매각제」 시행
  - 주택연금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아 부채상환에 활용하도록 주택연금 사전가입제(60→50세) 추진
- ② (렌트 푸어) 수요자 맞춤형 지원 실시
  - 수요가 높은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철도·공공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 건설(5년간 20만호)
  - 전세 수요자를 위해 입주 주택을 담보로 저리 대출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도입
- ③ (보편적 주거복지) 임대주택을 확대하고, 주거비 부담을 완화
  - 매입전세임대 확대 및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추진

## 가. 과제개요

- ☐ 신용회복지원, 고금리부담 경감 등을 통해 서민들의 금융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불법추심 등에 따른 금융피해를 예방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국민행복기금 설립) 채무불이행자 및 학자금대출자의 채무조정, 고금리 부담 경감 등을 위해 “국민행복기금” 설립
- ② (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) 금융회사·민간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장기연체 채무를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하여 채무조정 실시  
\* 단기연체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
- ③ (저금리대출로의 전환) 기존 바뀐드림론보다 지원 대상·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서민의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
- ④ (학자금대출 채무조정) 장학재단과 금융회사의 학자금 대출 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하여 채무조정 실시
- ⑤ (프리워크아웃 확대) 연체우려·단기연체자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신속한 자활 지원
- ⑥ (불법추심 피해방지) 민간 자산관리회사의 자격요건 강화 등을 통해 과도한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
- ⑦ (개인신용평가에 대한 항변권 강화) 소비자에게 신용평가 결과를 통지하고 부적정한 등급이라 판단시 이의제기하는 경로 마련

## 가. 과제개요

- ☐ 학생·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감축하여, 경제적 여건 등에 상관 없이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행복교육 실현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고교 무상교육 실시) 지역별·소득계층별·교육비 항목별로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

\* 사립외고·국제고와 자사고에 대한 무상교육 여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후 검토

- ② (사교육비 경감 추진) 학교 내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를 위해 「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」을 제정하고 EBS 교육서비스 운영을 내실화

- ③ (한국형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 구축) 한 번의 원서작성으로 희망하는 여러 곳의 대학에 원서를 접수할 수 있게 지원하고, 대입 전형료 투명성 제고 추진

- ④ (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) 실제 등록금 대비 소득 수준별 지원\*을 추진하고 든든학자금(ICL) 대출자격을 전면 확대\*\*

\* 소득수준별 지원방안 : 기초~8분위, 전액~25%

\*\* 소득 8분위 이상 학부생으로 전면 확대

- ⑤ (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) 든든학자금(ICL)과 일반상환학자금 이자율 인하를 통해 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 추진

- ⑥ (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) 국·공유지 및 철도부지를 활용한 행복(연합) 기숙사 건립 등을 통해 기숙사 수용률을 확대하고 기숙사비 인하 추진

## 가. 과제개요

- ☐ 고가 스마트 폰의 확산, 통신서비스 이용량\*의 증가로 통신비 지출\*\*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**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** 추진

\* 전체 이동통신 데이터량은 '09.11월 대비 약 130배 증가('12.11월 기준)

\*\* 가계 통신비 : 가구당(3.4명) '08년 월 13만4천원 → '12년 3/4분기 월 15만5천원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이동전화 가입비 폐지 유도) 소비자가 가입시 마다 지출하는 가입비 (평균 3만원)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'15년 말까지 폐지 유도

- ② (알뜰폰 서비스 활성화) 기존 이동전화보다 20~30% 싼 알뜰폰서비스\*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통업체 등의 시장 진입 유도 등을 추진하여 이동통신시장의 요금경쟁 촉진

\* 알뜰폰서비스: 기존 이통3사의 망을 도매로 빌려 이동전화서비스 제공

- ③ (무선인터넷전화 이용 확대 유도) 음성전화 대체가 가능하지만 현재 5만 4천원이상 요금제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무선인터넷전화 (m-VoIP)를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이용 가능토록 확대 유도

- ④ (스마트폰 가격 인하 유도) 중저가 단말기 등 다양한 단말기 출시를 유도하고, 단말기 자급제\* 활성화로 단말기 가격 경쟁 유도

\* 통신사가 아닌 제조업체·편의점·온라인쇼핑몰 등이 유통하는 단말기를 이용자가 구입하여 원하는 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하는 제도

- 제조사·유통업체·알뜰폰 업체 등으로 공동조달·판매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, 자급 단말기의 품질 제고를 위해 테스트 베드 지원

## 가. 과제개요

- ☐ 재해지원, 직접지불제, 경영비 절감 등을 통한 농어가 소득·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고 FTA 지원대책 내실화 추진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재해대응) 실질적인 재해지원을 위해 보험·지원제도 전면 개편
  -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'17년까지 단계적으로 50% 이상으로 확대하고, 보장의 범위와 보험료도 현실성 있게 재편
    - 사과·배·단감·곶감·감귤은 과수 종합보장방식으로 단계적 전환
    - 농어가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농작물의 국가재보험 기준 손해율을 하향조정하고, 신속한 피해조사를 위한 전문손해 평가인력 양성 및 통계조사 강화 등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
  - 피해산정 기준, 정전 2차 피해 등 재해복구지원 현실화 추진
- ② (직접지불제) 쌀·밭직불의 단가인상 및 제도개선 추진
  - 쌀고정직불금은 단계적으로 인상( '12년 ha당 70만원 → 100만원)하고 밭 직불제는 연차적으로 지원대상 품목과 지목 제한을 해제
  -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사료작물도 밭직불 대상에 포함하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본격 시행
- ③ (농업경영비 절감) 농자재유통센터 건립, 농자재 공정거래체계 확립, 농기계 임대 확대로 농자재 구입부담을 완화하고 농작업 대행도 확대
- ④ (FTA 보완대책) 국내 대책 추진상황을 내실있게 관리·보완

## 가. 과제개요

- 기존 도매시장 중심에서 농협 등 생산자 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·직거래 확산을 통해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생산자는 더 받고 소비자는 덜 내는 상생구조 마련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농·수협 중심의 유통계열화로 유통단계를 축소, 생산자·소비자에게 혜택
  - 농산물은 농협 산지유통센터 확충 및 ‘13~’ 15년중, 5대 권역별 ‘농산물도매물류센터’ 개설 등으로 농협 비중을 대폭 확대
  - 축산물은 선진국형 도축·가공·유통 일관시스템을 통해 계열화를 확립하고, 농협 관리·운영 점포를 대폭 늘려 소비자가격 인하 유도
    - 농가는 생산, 지역축협은 수집·공급, 농협중앙회는 도축·가공·유통·판매를 담당하는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
  - 수산물은 수협중앙회를 판매조직으로 육성하여 산지수협이 생산한 상품을 수협중앙회가 직접 판매(도매중심) 추진
- ② 생협, 직거래, 사이버거래 등 소비자·생산자 주도 新 유통경로 확산과 직거래 비중 확대로 유통망간 경쟁체제 구축
  - 생협, 파머스 마켓, 로컬푸드(지역내), 꾸러미 사업(농촌-도시간) 활성화를 위한 (가칭) 농산물 직거래법 제정
- ③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, 정가수의매매 확대 등 도매시장 유통 효율화 추진
  - 수시로 파동을 겪는 배추는 농협 계약재배물량과 농식품유통공사 상시비축물량을 가격급등시 방출하여 가격안정 도모



## 가. 과제개요

-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정년 연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 확충 및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

\* '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OECD 평균수준으로 단축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근로시간제도 및 교대제 개편 지원) 노사정위원회 논의 결과 및 국회 계류중인 개정안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

- ▲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되, 연차휴가 방안 병행 추진
- ▲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합리적으로 조정
- ▲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

- 중소기업 교대제 개편 패키지 지원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 및 일자리 나누기 지원

- ② (세대간 상생고용 프로그램)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활성화,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 신규채용시 임금 일부 등 지원

- ③ (단계적 정년 연장) 노사정 공론화를 통해 정년 연장을 추진하되, '17년부터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시행

- 정년 의무화 이전까지 고용지원금제도 개편 등을 통해 자율적 정년 연장 유도 및 「2050 함께 일하기 캠페인」 등 공감대 확산

- ④ (재취업 지원) 인생 이모작을 위한 '숙련진단 및 경력경로 설계', 「중장년층 취업아카데미」 개설 등 맞춤형 직업훈련·취업지원

-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게 중장년층 전직지원 의무 부과 등 전직 훈련 활성화와 함께 퇴직인력의 전문성·경험 활용기회\* 확대

\* 사회공헌 일자리사업(50세 이상 퇴직전문인력), 산업현장교수단(명장 등) 등

## 가. 과제개요

- 정리해고 요건 강화, 고용재난지역 선포 등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불안 완화 및 노동시장 참여 제고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고용안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) 업무재조정·무급휴직 등 판례상 해고회피 노력 인정 사유 명문화 등 해고회피노력 강화

- 일이 많을 때는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하고, 경기불황시에는 저축한 유급휴가를 활용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도입
- 사용자가 해고자에게 서면으로 재고용 우선권에 대해 알리고, 재고용 의무기간 동안 관련 채용계획을 통지하도록 의무화

- ② (고용재난지역<고용촉진특별구역> 선정·지원) 지정기준 완화 및 고용부장관의 직권지정 가능 요건\* 신설을 통한 신속 지원

\* 단기간 내에 회복하기 어려운 고용 감소 등

- 주요 지역·업종에 대한 일자리 예보체계를 구축하여 불황 업종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
- 지역고용 활성화와 해고근로자 생활안정 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특별지원과 지역고용활성화 패키지\* 제공

\* 고용유지자금 대부, 무급휴업·휴직자 우선 지원, 힐링 프로그램+지역맞춤형 사업, 취업성공패키지 요건 완화·종합취업지원대책, 구직급여의 지역연장급여제도 도입 등



## 추진전략 10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

---

(65) 행복한 임신과 출산

(66)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

(67)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(0~5세)

(68)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



## 가. 과제 개요

- ☐ 인구구조 고령화의 주요 요인인 저출산 문제 해소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맞춤형 임신·출산 비용 지원) 기저귀 및 조제분유, 영양플러스 지원, 난임 부부 체외수정 지원 확대, 산전 방문간호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 확대, 만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비 본인부담 폐지 및 항목 확대 추진
- ② (고위험 임신부 지원) 고위험산모에게 고운맘카드(50만원)외 경비 추가 지원, 권역별 고위험 산모·신생아 통합센터 설치·운영
- ③ (임신 분만 취약지 의료지원) 공공형 산부인과 ' 16년까지 단계적 확대
- ④ (자녀장려세제 도입) 자녀장려금 지원대상·수준·방법 등을 검토, 조세특례제한법 개정
- ⑤ (다자녀 지원)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 단계적 확대, 셋째 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방안 마련
- ⑥ (일터에서의 임신·출산지원 강화)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신청제 도입,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발굴 및 참여 사업장 지원 수준 인상, 「아빠의 달」 도입을 통한 아빠의 출산휴가 장려
- ⑦ (출산정책 거버넌스 구축) 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」 중심의 인구정책컨트론타워 운영, 공공·민간자원의 효율적 활용 도모

## 가. 과제 개요

- ☐ 수요자 중심의 육아인프라 확충 및 육아여건 개선을 통해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육아시스템 구축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)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등 확충,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 개선 및 직장보육시설 확충  
\* 보육교사 처우개선 실태 조사 및 임금수준 평가인증 연계 추진 병행
- ② (맞춤형 보육 서비스) 일시보육서비스 확대 검토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전국 확산
- ③ (근로자 자녀양육 여건 조성)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까지 육아휴직 사용 확대 검토·추진, 비정규직 계속고용지원금 및 중소기업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원 확대 등
- ④ (돌봄서비스 확대) 영아종일제 지원, 시간제 이용대상을 확대  
\*하고 방과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
\* (영아종일제) 현행 만12개월 이하 아동에서 만 2세 이하까지 단계적 확대  
(시간제 이용대상) 취업부모 자녀에서 모든 아동으로 확대
- ⑤ (학교내 돌봄강화) 오후 5시까지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프로그램 무료 제공, 저녁 10시까지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 
\* 돌봄서비스 종합안내·공동 수요조사·사각지대 해소 등 연계, 지역협의체 구성 등 부처별 돌봄사업 연계체제 강화 병행
- ⑥ (문화예술 돌봄교육 활성화) 방과 후 돌봄교실 연계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, 소외지역 소규모 초등학교 대상 1인 1예능 지원 및 지역 아동센터 대상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

## 가. 과제개요

- 영유아 보육·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
  - 0-5세 보육료 국가 전액 부담을 통해 보육관련 가계부담 해소
  - 3~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0-5세 보육 국가완전 책임제 실현 (보건복지부)
  - (보육료 전액 지원) 0~5세 보육료 전 계층 지원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 특별활동비 등 보육료 외 시설 이용 비용 지원 검토
  - (적정보육료 산출)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보육비용 계측
  - (양육수당) 시설미이용 0~2세 차상위 가구에 지급하던 양육수당을 소득구분 없이 0~5세까지 전 계층 확대
  - (평가인증) 평가인증 강화 및 부모 모니터링단 구성·운영으로 민간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제고
- ② 3~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 (교육과학기술부)
  - (누리과정 지원) 3~5세 누리과정 지원단가의 단계적 인상 추진
  - (교사 확충 등) 누리과정 확대에 따라 국공립 유치원 신증설에 필요한 유치원 교사 확보 및 역량강화
    - 사립유치원 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한 단계적 처우개선 추진

## 가. 과제개요

- ☐ 여성의 사회·경제 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 정책 추진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 구현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) 공직, 교직, 공공기관 등의 여성관리자 및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, 여성인재 아카데미 설치를 통한 여성리더 양성 및 여성 인재풀 확충
- ② (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)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충, 학력·경력단절기간 등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및 종합 취업 지원서비스 제공, 가족친화인증 확대 및 인센티브 지원 등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
- ③ (유연한 일자리 확대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정착)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,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유연 근무제도 활성화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
- ④ (부문별·지역별 성평등 수준의 실질적 개선)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내실화, 공무원에 대한 양성평등교육 확대
  - 여성정책조정회의 기능 강화, 국가성평등지수와 지역성평등지수의 주기적 측정·발표 및 ‘여성친화도시’ 지정·확산

## 국정목표 3

### -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
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추진전략 11 .....           | 107 |
|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           |     |
| 추진전략 12 .....           | 113 |
|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 체제 구축    |     |
| 추진전략 13 .....           | 119 |
| 나를 찾는 문화, 모두가 누리는 문화 구현 |     |



## **추진전략 11**    **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**

---

(69)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

(70) 대입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입시 간소화

(71)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

(72)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



## 가. 과제개요

- 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육과정,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과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해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교육으로 전환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) 기본 인성덕목 생활화 교육 실시, 학생참여와 협력 학습 강화, 인성중심 학교문화 조성\* 추진

\* 인성교육 중심 교육과정 편성·운행을 위한 컨설팅 및 교사 연수 등

- ② (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) 토론·실습·체험 중심의 중학교 자유학기제\*를 도입하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제도를 개선\*\*

\* 한 학기동안 지필시험 없이 다양한 체험학습 과정과 결과를 학생부에 기록하고, 단위학교의 운영자율성 대폭 확대

\*\* 초등학교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, 중학교는 평가과목 감축

- ③ (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) 참고서가 없어도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하고 디지털교과서와 연계

- ④ (학교체육 활성화) 체육전담교사, 스포츠강사 확대 배치 및 우수 스포츠클럽 지원을 통해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

- ⑤ (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) 진로진학상담교사를 확충하고 재학중 직업체험 확대, 온라인 진로설계 지원 시스템 구축 추진

-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계하여 개인의 진로설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생활기록부 연계 활용

## 가. 과제개요

- ☐ 지나치게 복잡한 입학전형을 간소화하여 대입준비 부담을 완화하고, 소득·지역·계층을 고려한 고른 기회 입학 전형 확대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대입전형 간소화) 전형요소를 학생부·논술·수능 위주로 간소화하고, 복잡한 전형명칭도 학생부·논술·수능 위주로 간소화
  -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형요소를 간소화하고, 고교교육에서 이수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유도
  - 대입전형에서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「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(제정예정)」에 규정 추진
- ② (고른기회 입학전형 확대) 신입생의 소득·지역·계층을 고려하여 선발하는 전형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확대하도록 유도
- ③ (대입전형 3년 예고제) 학생들이 중3때 자신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입전형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3년 전 예고하는 방안 추진

## 가. 과제개요

-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·연구여건 개선으로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
  - 효율적인 대학재정 지원 및 평가체제를 강화하여 글로벌 지역대학 특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한 대학 집중 육성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재정지원 확대) 임기 내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투자규모 GDP 대비 1% 수준 달성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지원규모 확대
- ② (재정지원 사업 확대 지원) 새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을 재편
  - 국가장학금 확대, 지역대학 및 전문대학 육성, 미래성장 산업분야 인재양성 등에 중점 투자
  - 특히, 추가 확보되는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대학 육성에 집중 투자
  - 선도대학연구소를 통한 연구와 교육을 통합한 새로운 인력양성시스템 투자
- ③ (성과평가 및 관리)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 및 성과분석을 통해 투자성과를 제고하고 대학교육의 질 관리 강화
  - 졸업 후 진로를 책임지는 대학교육의 질 관리 강화를 위해 학생의 진로와 관련한 교육활동을 대학 정보공시사항에 추가하는 방안 검토

### 가. 과제개요

- 교원의 행정업무 및 수업시수를 경감하고 교원평가제도를 개선하여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 조성
  - 학급당 학생수 및 교원 1인당 학생수 감축 등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교교육의 질 제고

#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교원의 행정업무 경감) 교무행정지원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 배치하고, 학교교육 통계 조사·활용 시스템 구축\* 등을 추진
  - \* 시·도교육청이 학교교육 통계·정보를 관리·제공하도록 입법화하고 매학기별로 주요통계를 조사·활용하는 시스템 구축
  - \* 에듀파인 활용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추진
- ② (교원평가 개선) 교원능력개발평가, 근무성적평가, 성과급평가를 교원평가로 일원화하고, 수업능력과 학생지도 실적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조정
- ③ (신규교사 채용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)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개선하고, 내실 있는 수업준비와 학생 지도를 위해 표준수업시수제 도입
  -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시·도교육청 학생수용계획(실태조사)을 수립하여 학급증설 및 신설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를 OECD국가 상위 수준으로 감축
  -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계획과 연계하여 시·도교육청, 지역별, 학교급별 교원 수급 계획 수립

## **추진전략 12**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 체제 구축

---

(73)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강화

(74)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

(75)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 체제 구축



### 가. 과제개요

- 고교 졸업 후 대학진학의 단선적 진로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진로중심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
  - 취업중심 고교 직업교육 체제를 강화하고, 고졸 재직자의 학위취득 및 경력개발 인프라를 구축

#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범부처 지원) 산업정책·고용정책과 연계하여 소관 부처, 지자체, 산업체가 마이스터고·특성화고 육성에 참여하도록 장려
- ② (마이스터고 다양화) 국가·지역 전략산업, FTA 대비 집중 육성 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마이스터고 지정 확대
- ③ (현장중심 교육 운영)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표준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·운영하여 고교 직업교육에 대한 신뢰도 제고
- ④ (직업교육 기회 확대)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\* 마련

\* 마이스터고·특성화고 입학 시 소질과 적성, 취업의지 등을 중점 반영한 선발 제도를 확대, 취업희망 일반고 학생들의 직업교육 위탁 확대·다양화 추진 등

- ⑤ (고졸 취업자 학위취득 인프라 구축) 고졸 취업자 등 재직자가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학위 취득 인프라\*를 확충하고 재직자 대상 국비 해외유학 프로그램 신설 추진

\* 성인근로자 중심 학사운영개선(학점교류, 유연학기제 등), 재직경력의 학점 인정, 후진학 장학금 지원 등

## 가. 과제개요

- 전문대학의 학위과정 다양화 및 재정투자 대폭 확대, 평생 직업교육 기능 및 국제화 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고등직업 교육 중심기관으로 육성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특성화 100개교) 전문대학이 산업기술인력, 서비스산업인력 등 산업분야별 핵심인력을 길러낼 수 있도록 대학학과별 특성화 유도
  - \*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과는 별개로 전문대학 특성화 100개교 육성사업 설계
- ② (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다양화) 전문대학 학제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고령화사회에 대응한 평생직업교육 강화 등 기능 다변화 도모
- ③ (산업기술명장대학원 과정 설치) 전문기술·기능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특수대학원 과정을 설치·운영하여 숙련기술 발전기회 제공
- ④ (평생직업능력선도대학 육성) 전문대학 중 일부를 100% 실무형 (가칭) ‘평생직업능력선도대학’으로 전환하여 평생학습 핵심 기관으로 육성
  - 창업보육, 자격취득 지원, 중소기업 공동교육실습 제공 등 비학위 과정을 중심으로 성인친화적 교육과정 운영
- ⑤ (‘세계로 프로젝트’ 추진) 국내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해외 산업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해외산업체에 취업하는 GHC(Global Hub College) 사업 확대
  - 전문대학생 해외연수 사업의 경우 해외취업과 연계성 제고

## 가. 과제개요

- 평생학습에 대한 다양한 참여 기반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스마트 국가평생교육체제 구축
  - 이를 통해, 평생학습 참여율을 OECD 평균(40.4%) 이상으로 향상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평생학습 종합전달체제 구축)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한 평생 교육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대국민 평생교육 종합 서비스 개통
- ② (행복학습지원센터 설치) 평생교육시설이 부족한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행복학습지원센터(읍면동 단위)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지원
  - 시·군·구별 평생학습관·도서관 등을 거점센터로 지정하여 지역별 행복학습지원센터 간 교류 및 학습정보 공유 촉진
- ③ (평생학습 네트워크)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역대학 및 산업체와 연계하는 통합네트워크 구축
  -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을 확대·개편하고 대학 및 지자체에 평생교육 관련 재정지원시 대학-산업체-지자체간 연계성 심사
  -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을 활용하여 지자체, 대학, 평생교육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개설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정보 종합제공
- ④ (맞춤형 평생교육) 생애주기별·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추진
  - 취미 및 여가생활(노년층), 창업·전직지원(장년층) 등 세대별 수요를 고려한 온·오프라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보급
  - 저학력자, 중소기업 재직자,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지원 병행



## **추진전략 13** **나를 찾는 문화, 모두가 누리는 문화 구현**

- (76) 문화재정 2% 달성 및 문화기본법 제정
- (77)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
- (78)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
- (79) 문화유산 보존·활용 및 한국문화 진흥
- (80)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
- (81)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
- (82) 생태휴식 공간 확대 등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



## 가. 과제개요

- ☐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, 문화예술 창작 기반 마련, 콘텐츠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문화재정 2% 달성 및 문화기본법 제정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### ① 문화재정 2% 달성

- ‘문화재정 2.0%’를 달성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, 일반회계 등 예산과 별도 세입이 있는 기금 재원을 균형 있게 확충

### ② 문화기본법 제정

- 국민행복, 사회통합, 갈등치유와 소통을 위한 문화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국민의 문화기본권 보장과 문화 진흥을 위한 국가적 책무를 규정한 「문화기본법」 제정(‘13 제정안 발의)
  - 범정부적으로 다양한 정책·사업의 문화적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한 종합적 검토·조정으로 문화국가 실현의 제도적 토대 마련
  - 중장기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으로 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 수립 및 체계적인 시행관리 시스템 구축
- 여가활성화기본법, 지역문화진흥법, 문화다양성보호증진법, 문화예술후원활성화법(메세나법) 등 연계법안 제정 추진(‘13)

### ③ 국민 문화행복지수를 개발하고(‘13), 정기적인 문화센서스 실시(‘14~)

### 가. 과제개요

- ☐ 예술인 복지 확충 및 문화예술 단체 지원 강화
- ☐ 순수예술분야와 다양성 영화 등 비주류 문화예술 분야 창작 지원

#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등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
- ②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기반 조성
  - 예술인 패스 도입 및 「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정
    - 문화예술진흥기금과 문화재보호기금 기부금 조세지원 강화
    - 미술품 감정평가제 도입 및 기업 미술품 구입시 손비인정 범위 확대
- ③ 순수기초예술 및 독립·인디·다양성 장르 등 지원 강화
  - 폐산업시설과 舊군사시설(서계동 등)의 문화·관광 공간 재조성
  - 예술분야 공공기관 운영 합리화와 국립예술단체 경쟁력 강화
- ④ 문화예술단체의 안정적 활동을 위한 비영리 문화법인 제도 도입
- ⑤ 예술창작지원센터 조성 등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
- ⑥ CT 5대 핵심기술 개발 및 문화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
  - 음악 창작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음원전송사용료제 개선

## 가. 과제개요

- ☐ 생애주기별 문화향유 지원체계 구축 및 장애인 등 문화소외 계층 문화향유 권리 보장, 지역 문화격차 해소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주민센터, 문예회관 등을 리모델링,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
  - 지역사회 문화동호회 활동의 거점 공간으로 조성
  - \* 조성 후 3년간, 인큐베이팅 단계에서는 모델 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 정착 지원
- ② 생애주기별 문화향유 지원체계 구축 및 여가모델 개발·보급
  - 어린이집·유치원에 문화예술교육사 파견( '14, 1,300개)
  - 전국 모든 학교(11,532개교)에 문화예술교육사 배치
  - 공연장, 박물관, 경기장 등 할인·면제를 위한 청소년 패스 도입
  - 여가친화기업 인증제 운영 및 직장동호회 문화예술교육사 파견
  - 문화114 콜센터 운영 및 문화복지사 지역별 배치 운영
  - 은퇴계층을 위한 골든에이지 캠페인과 자원봉사 기회 제공
- ③ 예술강사 장애인시설 파견 확대 등 장애인 문화향유 권리 보장
- ④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도시·문화마을 조성 및 지역 문화격차 해소
  -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및 지역문화재단을 지역 거점으로 육성
  - 지역 상주단체 육성 및 문예진흥기금 지역협력형 사업 대폭 확대
- ⑤ 문화·관광·체육시설 투자금액에 세액공제 혜택 제공 등

### 가. 과제개요

- ☐ 문화유산 관리 강화, 향유기회 확대 및 한국문화 진흥체계 구축
- ☐ 남북 간 및 세계 각국과의 문화교류 확대와 문화다양성 증진

#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무형문화유산 법률 제정 및 문화재 보호기금 확충
  - 서원·향교 등 문화관광 자원화 및 문화유산 디지털 DB 구축
- ② 권역별 국립 수장고 건립 및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 국립 승격 등
- ③ 한국학, 한국어, 전통문화, 문화유산을 연계하여 정신문화 진작
  - 한민족 문화아카이브 구축 및 도서관의 인문학 부흥 거점화
  - 재외 한국문화원·세종학당을 해외한국문화보급의 거점기관으로 활용
- ④ 남북한 동질성 회복과 협력기반 조성 및 문화다양성 증진
  - 세계문화의집 조성, 상호문화교류의 해 운영
  - 문화예술 ODA 사업 및 무지개다리 사업 확대
- ⑤ 국제문화교류진흥 법률 제정 및 국제문화교류진흥원 설립
- ⑥ 재외 한국문화원 확대, 뉴욕·파리 코리아센터 전환
- ⑦ 한국문화원장 문화 전문성 강화 및 근거 법령 제정 추진
- ⑧ 세종학당 확대·전문성 강화 및 한국어 교육 총괄 조정기능 수행

## 가. 과제개요

### □ 과제목표

- 생활스포츠 프로그램·시설을 확충하고 생활체육 참여율을 두 배로 증가시켜 건강한 100세 시대 건인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100세까지 건강하게,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지원시스템 구축
  -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, 통합콜센터(#7330) 도입
  - 전 국민 스포츠·체력 인증제 도입(2013/국민체육진흥법 개정)
- ② 시·군·구(227개)에 문화법인형 공공스포츠클럽 설립
  -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 지원 및 선수 출신 지도자의 일자리 창출
- ③ 국가대표 체육지도자 자격 부여, 진로 지원 등 체육인복지 강화
  - 국가대표 경력자 지도자 자격 취득 요건 완화로 취업 지원
- ④ 태릉선수촌 기능 유지, 국가대표훈련장 단계적 기능 분담
- ⑤ 올림픽공원내 체육인 명예의 전당·호텔·컨벤션을 갖춘 올림픽 스포츠 콤플렉스를 조성
- ⑥ 학교 스포츠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
  - 스포츠강사 법제화( '13)를 통한 제도적 정착 및 근무기간 연장(10개월→1년) 및 보수 현실화, 전문성 강화로 스포츠 일자리 창출

### 가. 과제개요

- 고부가고품격의 융복합형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2017년 외래관광객 1,600만명을 달성하고, 국내 관광 활성화

#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MICE, 의료, 한류, 크루즈, 역사·전통문화 체험, 레저·스포츠 등 고부가가치 6대 관광·레저산업 육성
- ② 관광을 통한 국민 행복, 관광복지 실현
  - 대체휴일제, 방학분산제 도입 등 여가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
  - 올해의 문화관광도시를 선정, 홍보마케팅·안내 체계 집중 지원
  -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(프랑스 근로자 여행장려제도) 도입 추진
- ③ 관광 일자리 창출과 근로조건 개선
  - 관광종사원 취업박람회 개최(2013~), 표준용역계약서 제정·보급, 관광통역안내사 공제회 설립지원 등 근로여건 개선
- ④ 지역 관광업체, 문화계, 상공인, 지역주민,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관광협의회(CVB: Convention & Visitor's Bureau) 설립을 지원하여 지역관광 활성화 추진
- ⑤ 저가관광을 탈피하여 고품격 관광으로 근본적 체질 개선
- ⑥ 소외계층 여행바우처 지원 및 무장애환경(barrier free) 인프라 확충
- ⑦ 고부가가치 창출 관광객에 대한 고품격 출입국행정서비스 제공

## 가. 과제개요

- ☐ 주거, 공원, 녹지, 하천 등 일상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생태휴식공간 확충) 국가도시공원, 동네쉼터, 도시농업 공간, 생활권 마을숲, 생태놀이터 등 도심 생태휴식공간 확충
  - 숲길과 등산로 정비 등을 통해 생명축을 복원하고 지류하천을 생태·레저·문화 등을 종합 고려한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
- ② (품격 있는 도시공간 조성) 높아진 국가 위상에 어울리는 아름답고 품격이 흐르는 도시·건축문화 형성 및 국토경관축 조성
  - 도시주변 개발제한구역 내 걷는 길·휴식문화공간 등을 확충하고 놀이터, 도서관, 커뮤니티 시설 등 기초 생활 인프라에 대한 지원 추진
- ③ (생활환경 개선) 작지만 국민의 일상 속 영향이 큰 불편사항 해소
  - (주택)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아파트 바닥구조 기준을 강화하고, 오염물질 저방출자재 사용 확대 등을 통해 실내공기질 개선
  - (교통) 저상버스·무장애시설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환경 개선
  - (기타) 교통·생활소음, 과도한 야간 눈부심 등 개선방안 마련



## 국정목표 4

### - 안전과 통합의 사회

|       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|
| 추진전략 14 .....     | 131 |
|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  |     |
| 추진전략 15 .....     | 141 |
| 재난·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|     |
| 추진전략 16 .....     | 151 |
|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 |     |
| 추진전략 17 .....     | 161 |
|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   |     |
| 추진전략 18 .....     | 169 |
|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 |     |



- (83) 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
- (84)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
- (85)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
- (86)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
- (87) 아동인권 보호강화 및 건강한 성장·발달지원
- (88)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
- (89)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구현
- (90) 민생치안 역량강화 기반 조성



## 가. 과제개요

- 성폭력 등 심각한 아동·여성폭력 범죄에 대응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여 국민의 안전 체감도를 높이고 피해자 보호 지원을 내실화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성폭력·성희롱 등 예방체계 구축 및 아동·청소년 성보호 강화
  - 여성·아동의 생애주기별 폭력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성인권 교육 강화, 아동·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 및 인터넷 등을 통한 성매매 범죄 단속 강화
- ②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 구축 및 성범죄자 관리체계 확립
  - 검찰청 및 경찰서에 성범죄 전담반 설치, 신상정보 등록자 등 우범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, 성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·교육 등 재범방지 시스템 강화
- ③ 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
  - 상담, 수사부터 재판까지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및 법률지원 강화, 상담·주거·의료 등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치료·재활 지원 체계 구축
  - 원스톱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확충 및 성폭력피해자와 가족의 기초생활 유지 지원을 위한 돌봄, 간병서비스 등 지원

## 가. 과제개요

- 지속성과 재발 위험성이 높고 가정 내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내실화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### ① 가정폭력 방지 및 예방체계 강화

- 가해자에 대한 공동주거사용·수익 및 처분행위 금지, 자녀면접 교섭권 제한 등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보완, 국가·지자체·공공기관 등의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화

### ② 가정폭력사건 처리의 전문성 확보 및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

-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도입, 수사관계자의 가정폭력 대응역량 강화 및 형사절차상 가정폭력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에 대한 보호 강화

### ③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·자립지원 강화

-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가족보호시설 확충, 쉼터 퇴소후 자립 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시설 단계적 확대 및 피해자 의료비 지원확대 및 직업훈련비 지원
-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(1577-1366), 쉼터 등을 통한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긴급지원 및 상담지원 강화, 가정폭력 피해자의 민사·가사사건 무료 법률구조 지원 강화

## 가. 과제개요

☐ 안전한 식품을 통한 소비자 건강 보호 및 신뢰제고

\* ‘안전’ 또는 ‘보통’ 비율 : (‘12) 66% → (‘17) 80%

\* 학교앞 식품안전 불안감 : (‘12) 48% → (‘17) 20%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### ①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 추진

- 식품범죄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, 학생안전지역내 문방구점 등 식품 판매행위 금지, 「음식점 위생 등급제」 도입, 인터넷 불법 식의약품 유통판매 차단, 합동단속 추진

### ② 통합 식품안전정보망 및 소통전담조직 구축

- ‘통합 식품안전정보망’을 구축하고 「위해소통센터」 설립으로 체계적 식품안전 소통망 구축

### ③ 부적합 식품 차단·추적관리 강화

-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'17년까지 전면 확대, 식품이력 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, 쇠고기 전자적 거래신고 확대

### ④ 농·축산식품 위생관리 강화

- GAP(농산물우수관리)·HACCP(식품안전인증) 적용 확대

### ⑤ 식품안전 소비자 참여 확대

- 원산지 및 영양성분 표시 확대, 식품용기 그린마크 및 포장·유통 농수산물 표시제 도입, 소비자 위생점검 요청제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, 축산물 관리에도 적용

### ⑥ 급식소 위생강화

- 급식조달시스템과 식중독 경보시스템 연계, 납품 전 안전성 조사 체계 구축, ‘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’ 설치 확대

### ⑦ 생산·제조단계 안전관리 강화

- 오염된 해역·토양 등에서 생산되는 농·수산물, 식염 등 유통·판매 차단, 식품안전인증(HACCP) 의무적용 확대

### ⑧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

- ‘사전예측 수입검사 시스템’ 구축, 수출국 현지실사 강화, 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」 제정

## 가. 과제개요

- ☐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학생위험 제로 학교 환경 조성) 학교 반경 200M 이내 학생 안전지역(safe zone) 지정
  - CCTV 성능 개선 및 설치 확대, 지자체 통합관제 강화 등 학생 위험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, 학생보호인력 운영 내실화, SOS 국민안심서비스 확대 등 학교 안전 인프라 강화
- ② (상담·치료지원 강화) Wee 프로젝트 확대 및 전문상담교사 등 전문 상담 인력 배치 확대를 통해 상담 치료지원 강화
  -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제도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으로 학교폭력·자살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관리 체계 확립
- ③ (학교폭력 예방 교육 강화) 국가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 표준 프로그램 개발\*하고 단계적 보급 확대
  - \* 집단상담을 기반으로 학생·교원·학부모의 공감·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“어울림프로그램”(2012년부터 시범운영 중)을 보완하여 개발
  - 자녀발달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학부모 교육 확대
  - 학생자치법정, 또래상담, 또래조정 등 다양한 학생자치활동 활성화

## 가. 과제개요

- ☐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발달 지원 및 동등한 출발기회 제공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드림스타트센터 확대) 아동 삶의 전 영역에 걸쳐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확대하고 빈곤아동이 많은 읍면동 전체로 단계적 확충

### < 주요 기능 >

- ▶ 지역 내 복지자원 관리 및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
- ▶ 지원 대상 아동 발굴 및 아동별 욕구사정
- ▶ 서비스 조정·연계: 현금, 바우처, 학대피해자 보호, 급식 등
- ▶ 초기상담, 지원계획, 서비스 지원·점검 등 사후관리 실시
- ▶ 요보호아동 판정·분류·보호체계 결정·연계

- ② (아동발달지원계좌 확대)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경제교육, 후원자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과 연계
- ③ (아동인권 보호 및 아동안전 강화) 아동인권 및 안전 관련 총괄 조정체계 구축,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제재 강화\*, 피해자 보호 제도\*\* 강화,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활성화

\* 학대행위자의 형 또는 보호처분 종료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 기관 취업 및 운영제한, 위반시 처벌 강화

\*\* 피해아동 전용 치료보호시설 운영 및 가족치유프로그램 운영 등

- ④ (입양아동의 안전·권익 보호) 국내 입양가정 및 미혼모 지원 내실화,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,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서비스 강화

## 가. 과제개요

- 범죄 피해자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신속한 피해 회복 및 건강한 사회생활 지원
  - 범죄피해자 심리지원시설 확충 및 심리치료비 지원 등 의료 지원 강화
  - ‘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’을 통한 상담 및 법률지원 강화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) 심리치유 및 임시주거를 위한 보호시설인 ‘스마일센터’를 전국에 설치, 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한 심리치료 비용과 피해자 간병비 등 치료 수반 경비 지원
- ② (범죄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법률지원 강화) ‘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’을 일선 검찰청에 배치하여 법률지원 강화, ‘법률홈닥터’ 및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강화
- ③ (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강화) 범죄발생 초기의 긴급한 소요를 위한 필요경비 지원, 범죄피해로 인해 거주가 곤란한 피해자들을 위한 이사비와 주거마련 비용 일부 지원
- ④ (범죄피해자 지원체계 강화) 범죄피해 유형별 조력·지원 매뉴얼 마련으로 지원사업의 효율성 강화,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교육 실시

## 가. 과제개요

- 법질서 존중 문화 확산과 법질서 확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신뢰사회 구현
  - 헌법·법률 교육 강화 등을 통한 민주시민의식과 준법의식 함양
  -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사법대응체제를 구축, 안전한 사회 구현
  -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법질서 확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법교육 강화) 민주 시민의식과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헌법교육 등 법교육 강화, 체험형 법교육 테마파크 및 법체험 포털 활성화
- ② (법질서 확립 운동) 지자체·민간과 함께하는 법질서확립 운동 및 공익캠페인 전개
- ③ (사회지도층 범죄 근절) 공직비리·권력형 비리 등 사회지도층 범죄 집중 단속, 비리 근절을 위한 장단기 대책 수립
  - 또한,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수사·재판·형집행 과정 등에서 특혜 시비가 없도록 법 집행의 공정성도 제고
- ④ (불법집단행동 대응체제 구축)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단계별 대응 체제 수립
  - 아울러, 불법·폭력시위에 따른 시민의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 지원도 강화

## 가. 과제개요

- 선진국 수준의 경찰인력 증원, 직무특성이 반영된 보수체계 개선, 조직혁신 등을 통해 민생치안 역량 강화로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경찰 책임성 강화) 총경급 이상 고위직 청렴도 평가제, 부패 징계 전력자 주요보직 원천 배제하는 「부패 One Strike Out」 제도 시행 등으로 부패비리를 근절, 치안행정의 투명성·신뢰성 확보
  - 경찰관 상시학습 체제 구축 및 찾아가는 현장교육 실시,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, 직책과 역할에 상응하는 관리자교육 강화 등 교육개혁을 통해 경찰조직의 전문성 제고
- ② (경찰인력 증원) 선진국 수준에 부족한 인력을 매년 4,000명씩 5년간 2만명을 증원, ‘학교·성폭력 대응’, ‘아동·청소년 보호’, ‘범죄예방’, ‘112센터’ 등 민생치안 분야에 우선 배치
- ③ (보수·수당 현실화) 경찰의 직무특성을 감안,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하여 경찰관들의 자부심과 사기 제고
  - 주요 사건사고가 야간에 집중되는 점, 교대근무로 인한 피로도 등을 고려, 수당 현실화 추진

## 추진전략 15

## 재난·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

- (91) 생활 안전 관련 공익신고 범위확대 및 신고자 보호 강화
- (92)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 체계 강화
- (93) 항공, 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
- (94)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 피해구제 강화
- (95)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
- (96) 에너지공급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
- (97)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조성 및 근로자 건강증진



## 가. 과제개요

- 공익침해신고 활성화로 안전·신뢰사회 구축에 기여
  - 민생(식품·안전), 불공정(경제적·사회적 약자 보호) 등의 분야를 법 적용대상에 추가하여 공익침해 신고제도의 실효성 강화
  - 공익신고자보호 강화를 통해 조직내부의 감시와 상호견제를 유도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###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

- 적용법률 추가 및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
  - \* 조직내부·주변의 감시와 제보 필요성이 높은 민생 안전 등 관련 법률

### ② 기관 간 협업을 통한 공익신고제도의 실효성 강화



- 공공기관의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보호 관련 운영시스템 구축 지속 지원
  - \*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기관(적용법률 소관부처, 지자체, 관련 공공기관 등)의 신고처리 지원을 위한 정책협의회 활성화, 교육자료 보급 등
- 자진신고에 대한 책임감면 확대 등 신고자 보호조치 강화

## 가. 과제개요

- ☐ 국가 재난관리시스템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 구현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### ① 통합재난대응시스템 구축

- 예방 중심의 선제적 재난관리 및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, 재난안전통신망 구축

### ② 유비쿼터스형 국민 중심 안전망 구축

-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형 재난관리체계 구축, 119 영상신고 기능구현 및 GPS 등을 이용한 신고자 위치확인 개선, 현장 중심의 U-안전관리시스템 구현, U-city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국민안전망 구축, 수요자 맞춤형·융합 기상정보서비스 제공, 지진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

### ③ 홍수·산사태 등 재해 걱정 없는 안심국토 실현

- 재해예방적 토지이용체계 확립, 도시하천유역 종합치수계획 마련, 강우레이더구축, 홍수위험지도 제작, 비탈면 정비, 상습 침수지역 하수관 확충 및 저류시설 설치, 산림재해 안전망 구축

### 가. 과제개요

- '17년까지 OECD 수준의 도로교통안전 확보 및 철도·항공·해양 안전 시스템을 체계화

#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육상교통)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분석, 우수운수회사 지정 및 CNG버스 내압용기 확대검사 등을 통한 대형교통사고 예방
- ② (교통문화) 교통안전 정책기능을 강화하고, 수도권 교통안전체험 센터 건립, 국민공감형 홍보 등을 통해 선진교통문화 정착
- ③ (도로) 도로안전 평가기법 개발·적용 및 위험도로 개선, 차량과 차량·도로가 정보를 공유하는 차세대 ITS(C-ITS) 도입
- ④ (철도) 철도노후 취역시설을 꾸준히 개량하고, 안전대책 추진 체계 보강, 안전인증체계 개편과 전문자격제도 확대 등 추진
- ⑤ (차량) 차선유지·자동비상 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보급 및 신기술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
- ⑥ (항공) 항공안전기술 선진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 항공안전관리 체계 확립
- ⑦ (해양) 해양사고율 10% 저감을 목표로 범정부 해상안전 대책을 시행하고 GPS 교란에 대비한 첨단 대체항법 시스템 구축

## 가. 과제개요

- 구미 불산 누출 같은 화학사고를 사전예방하고, 석면 등 유해물질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
  - 장외영향평가제, 환경오염피해배상제도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피해구제 체계 마련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### ① 화학사고 예방·대응·수습 체계 구축

- 사고의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외영향평가를 도입하고, 화학사고 전문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 설치( '13년)

### ② 환경성질환 예방·관리 체계 구축

- 유해물질의 출시 전·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「화학물질의 등록 평가법」을 제정( '13년)하고 안전표시 등을 선진화( '14년)
- 어린이, 노약자 등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을 진단하며 폐광산 등에 대한 건강영향을 조사( '13~' 17년, 114개지역)하고, 환경성질환 연구를 위한 환경보건센터 추가 지정

### ③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확립

-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원인자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피해배상제를, 유독물생산자 등에게 환경오염 피해보험 의무가입제를 도입하고, 원인자 미상 피해의 구제를 위한 기금을 설치( '13~' 14년 중 법제화)

## 가. 과제개요

- ☐ 안전을 최우선으로 원자력안전관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 구현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노후원전(고리 1호기, 월성 1호기) Stress Test 실시 등 원전에 대한 엄격한 안전점검 시행
- ② 국민신뢰 확보를 위한 안전규제의 투명성 제고
  - 일반국민에게 원전 안전 정보를 전면 공개하기 위해 공개범위, 공개방법 등의 제도를 마련·시행
  - 원전 부지별로 '원전안전 정보공개센터'를 설립하여 원전 정보 공개 및 지역주민과의 상시적 정보소통의 공간으로 활용
- ③ 원전비리의 근원적 척결을 위한 원전관리시스템 재정비
  - 한수원에 추가하여 부품 납품업체, 용역업체 등도 안전규제 대상에 포함하고, 법령위반 시 제재근거 마련
  - 검사주기 단축(2년→1년), 인력 확대(5명→50명), 검사대상 확대(사업자→부품 공급자) 등 대폭 강화된 품질검사 실시
- ④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안전규제 전문역량 확보
  - 원전 호기당 규제인력을 단계적 확대(현재 선진국 1/2 수준)
  - 전체 원자력 R&D에서 안전연구 비중을 5년 내 40%까지 확대
- ⑤ 정부개편 취지에 맞춰, 원자력안전체계의 실질적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 역량과 기능을 세밀하게 설계
  -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규제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체계 완비
  - 안전규제 홍보 전담기구를 확대하여 일반 국민, 지역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활동 전개

## 가. 과제개요

-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
  - 에너지안전 종합관리체계 구축, 원별 시설안전관리 강화, 제도 개선 등 종합적 대응방안 마련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체계 정비·강화
  - (공기업 관리·감독 강화) 개별 에너지공기업 내부의 안전관리를 전담하고 총괄·관리하는 “안전관리 위원회” 설치·운영
  - (안전 DB구축, 공유) 정비이력·고장사례·복구방법 등을 DB화하고, 기업간에 공유하여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체계화
  - (투명성 제고) 모든 에너지공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자 취업현황 및 자재 납품과정 등에서 비리가 발견된 업체 등에 대한 DB 구축, 관리
- ② 에너지원별 시설안전관리 강화
  - (원전) 안전과 국민신뢰 회복 최우선을 목표로 원전안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(~ ‘15년)하고, 장기가동 설비 선제적 교체, 지역 주민 등 민간감시 강화로 원전 운영의 투명성 제고
  - (전기) 노후발전설비 계속운전 기준 마련, 합리적인 예방정비 계획수립·시행 등 전력설비의 안전성과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강화
  - (가스)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독성가스(독성가스 중화 센터 신설·고압가스 차량 관제시스템 구축 등)와 노후배관 관리(위험도 평가 도입 등) 강화
  - (석유) 환경오염과 화재시 피해최소화를 위해 지하 유류저장 시설 오염예방 방안마련 및 저장탱크의 소방시설 작동점검 의무화 등 추진
  - (광산) 채굴환경에 적합한 안전시설(통기·배수) 확충, 광산관리 제도 개선, 안전교육 프로그램 강화로 광산사고 재발을 방지

## 가. 과제개요

- ☐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안심 일터 조성을 통해 산업현장의 재해감소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안전보건관리역량 강화) 소규모 사업장의 직·반장을 안전담당자로 지정, 기초적인 안전보건활동 수행 유도

\*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의무 업종을 전 업종으로 확대

- ② (자율적 재해예방활동 활성화) 위험성평가 강화 및 산재예방요율제(산재예방활동을 열심히 하는 경우 산재보험료율 할인) 도입 등

- 중대산업사고(화재·폭발·누출사고 등) 예방을 위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·심사대상(5인이상 → 전 사업장) 및 적용 대상물질 확대

- ③ (원청업체의 협력업체에 대한 유해위험 관리 강화) 도급업체의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\*

\* 유해·위험설비 관련 작업 도급시 유해·위험정보 제공 의무화, 도급업체의 협력업체에 대한 재해예방조치 업종 확대(건설·제조업→ 전 업종) 등

- ④ (직업병 예방 강화 및 인정기준 개선) 특별관리물질을 국제수준으로 확대하고,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경고 표시의 현장 작동성 강화

- 새로운 유해요인·질병을 반영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정비



- (98)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
- (99)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
- (100) 안정적인 에너지수급 및 산업구조 선진화
- (101)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
- (102)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
- (103)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
- (104) 해양환경 보전과 개발의 조화
- (105) 자원·에너지의 낭비를 줄여 자원순환사회 실현



## 가. 과제개요

- ☐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, 환경과 성장이 선순환되도록 하고 지구 환경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 수행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### ①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이행

-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시행(2015년) 관련 제도적 기반 및 역량 강화
  -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추진, 배출권거래제 기본 계획 및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등 제도 운영방안 마련

### ② 범지구적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에 주도적 역할 수행

- 2020년 이후 新기후체제 논의에 대비, 우리의 산업구조,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여력 등을 감안한 협상전략 수립 및 대응
  -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(19차, 2013.11, 폴란드 바르샤바) 및 기후변화 정상회의(2014년) 등 국제기후변화 협의체를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중재자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

### ③ 국제적인 기후재원 공여국으로서의 역할 강화

- 국제기후재원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개도국 지원 장기재원이 GCF(녹색기후기금)를 통해 조성·활용되도록 유도
- 개도국에 대한 녹색성장 경험전수 및 정책자문 사업 확대 등으로 녹색ODA 비중 확대에 노력

## 가. 과제개요

- 기후변화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 ‘지속가능사회’ 구현
  - 정부, 민간 등 사회 전 분야의 적응역량 제고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### ① 기후변화 감시·예측능력 확보

- 환경위성체(‘18년 발사)를 확보하여 기후변화 감시·예측능력을 강화
- 이상기후 위험요인에 대응한 환경영향평가체계 구축(‘13년)

### ②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 최소화 및 생물다양성 관리

-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기인 건강피해 예방 및 감염성 질병관리를 강화(호한, 혹서 대비 쉼터 마련, 수인성 질병 모니터링 강화 등)
- 기후-생태변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·운영 및 생물자원 조사 발굴, 위해외래종 등 관리 강화

### ③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 및 적응대책 수립 지원

- 개발사업 추진시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을 확대하고, 빗물이용 시설, 중수도 등 확대등을 위한 「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
- 민간 적응대책 수립을 지원하고, 적응사업 해외진출 추진

## 가. 과제개요

- 그간 성장을 뒷받침해온 싸고 좋은 에너지 공급우선 정책은 전력사용량 급증, 적정공급시설 적기확보 미흡 등 수급불안을 초래
  - \* 전기의 경우 지난 10년간 요금상승이 21%에 그쳐(등유는 139% 상승) 소비가 63% 증가하는 등 전기사용 집중현상 심화(원예하우스, 주물공장 석탄로 등도 전기로 전환)
-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장기 에너지 수급전략을 새로 수립하고 원활한 수급을 보장하기 위한 에너지시장 구조 선진화 추진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### ① 에너지 수급 안정화 기반 확충

- (전력) 적정 예비율 확보(22%), 입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 및 합리적인 전기소비 유도를 위한 요금체계 개편(안) 마련·시행
  - \* 에너지 푸어계층의 요금할인 확대, 주택용 누진제 개편 등 서민과 중산층은 부담은 완화
- (석유가스) 장기도입계약 확대( '11년 76% → ' 30년 85%), 원유도입선 다변화, 세일가스 적기도입( '17년), 인수기지 등 공급인프라 확충
- (원전) 안정적인 전력공급, CO<sub>2</sub> 감축 등을 위해 불가피한 원전은 안전 최우선으로 운영·관리하고 금년 중 ' 25년 이후 적정규모를 재설정
  -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해 「공론화위원회」를 발족하고(' 13.4월), 논의결과를 토대로 임기내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과 착공 추진

### ② (에너지 절약) 캠페인성 절약정책에서 탈피, 절전제품 개발·보급, 에너지절약형 건물 확대, 연비향상 등 시스템형 절약정책 추진

### ③ (해외자원개발) 국내도입이 용이한 사업을 확대하고, 장기적인 자원 파트너십 형성에 주력하며, 자원개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강화, 기술개발, 탐사성공 중심 자원개발 등 질적 성장 추진

### ④ (에너지산업 구조개편) 전력, 가스시장의 효율화·건실한 수급 시장 구축을 목표로 대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제도를 개선

- \* (전력) 수급관리체계에 대한 근본 대안마련, (가스) 민간 직수입 활성화 등

## 가. 과제개요

- 미래 핵심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및 신성장동력 산업화를 위해 중장기 전략 수립
  -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가로막는 규제 및 제도개선, 산업화를 촉진하는 기술개발, 스마트그리드 구축 등에 주력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신재생 중장기 목표 설정)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( '13년 수립)에 ' 35년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보급목표 재설정(현재 ' 30년 비중 목표 11%)
  - 태양광·풍력·조력 등 신재생에너지 국내잠재량, 입지정보, 시도별 설치가능성 등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 업그레이드
- ② (신재생 보급제도 혁신 및 시장창출) 정부의 직접 보조금 투입위주에서 시장창출을 통해 신재생보급·산업화가 촉진되도록 정책 전환
  - (보급사업 개편) 태양광·열 등 원별로 중장기 보급목표를 재수립하고 복잡한 보급프로그램 단순화 등 재정투입의 효율성 제고
  - (규제개선) 신재생 보급을 가로막는 규제,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여 보급시장의 병목해소 추진
  - 대규모 해상풍력(서남해안 2.5GW) 프로젝트, 차세대 태양광 등 R&D 투자확대 등을 통해 풍력·태양광 분야 기술경쟁력 제고
  - 금년 말까지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국가보급 목표와 산업화 전략을 담은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( '13~ ' 35) 수립 및 시행
- ③ (스마트그리드 구축)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뒷받침, 전력수요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국적 스마트그리드 기반을 조기구축

## 가. 과제개요

- 물, 공기, 대기질 등 생활환경 취약지역을 없애고, 도시·농촌의 환경질을 모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
  - 환경오염시설의 허가제도를 선진국형으로 혁신하여 환경질 개선은 물론 우수 환경기술시장을 활성화하여 수출산업화, GDP 및 일자리 창출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환경오염시설의 허가제도 선진화) 무기한 허가제를 유기한 재허가제로 전환하고 최상가용기술(BAT : Best Available Technology economically achievable)을 적용한 경우에만 재허가
- ② (건강한 물 환경 조성) 농어촌 상수도 보급 확대,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확충, 영농폐기물 수거체계 확립으로 농촌환경을 개선하고, 정수장 고도화 및 수도관 정비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
  - 녹조 발생 원인물질 적극 감축 등으로 수질오염을 저감하는 한편, 오염사고예방을 위해 완충저류시설 확대 설치
  - 오염·훼손 하천의 수생태계(하천 1,667km), 백두대간, DMZ 등을 복원하여 한반도 핵심 생태축을 보전
- ③ (대기질 개선) 도시·공단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오염 총량관리를 강화 ('13년 ~)하고, 전기차·천연가스버스 보급을 확대
  - 폐기물이 비산·유출되는 전근대적 수거차량을 Tank Lorry형으로 현대화

## 가. 과제개요

-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유도하고, 국토·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국토 창조
  - 외곽 확장보다는 도시재생으로 국토정책방향을 재정립하고, 공간분석기법 등을 활용하여 과학적인 국토계획 수립 지원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과잉·난개발 차단) 최고정책당국자 실명제 도입, 사업 평가·관리시스템 구축, 국토·환경계획 연동제 등 제도개선 추진
  - 성장관리방안 도입, 개발행위 허가기준 강화 등을 통해 개발 압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난개발을 최대한 억제
- ② (토지이용 인·허가 통합)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의 각종 평가·협의의 통합운영방안을 마련하고, 주민의견수렴 내실화
- ③ (도시재생) 신규 개발에 따른 녹지훼손 부담을 최소화하고, 기존의 사회·물리적 자산을 활용하는 도시재생을 적극 추진
  - 도시재생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 선도 지역으로 지정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집중적으로 투자
- ④ (공간 빅데이터체계 구축) 국가공간정보 플랫폼에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합한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국토계획 수립 지원

## 가. 과제개요

- ☐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, 그간 방치된 해양 공간의 이용·활용을 제고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특별관리해역 관리강화) 환경관리해역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특별관리해역 관리를 강화하고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확대
- ② (해양정화 및 보호) 오염퇴적물 정화 등 해양복원사업을 실시하고, 육상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를 통해 해양 환경 보호
- ③ (연안유희지 휴양시설 조성) 국가소유 연안유희지 등을 활용하여 체육시설, 친수공간, 텐트촌 등 휴양시설 조성
  - 전국 무인도서별로 개발·보존 필요성 등에 따라 관리유형을 지정하고, 이를 통해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
- ④ (연안침식관리 및 대응) 연안침식 가속화 문제 해소를 위해 ‘연안침식 관리구역제’를 도입하고 국가시행 연안정비사업 추진
  - \* 연안침식 모니터링 대상지역 확대 및 자연친화적 침식대응 기술 R&D 추진
- ⑤ (연안보호 강화) 환경이 우수한 자연해안선 보전을 위해 연안 지역 토지매입, 바닷가 연안완충구역 지정 등 제도개선 추진

## 가. 과제개요

- 자원·에너지 선순환 제도화로 지속가능발전 조기 실현
  -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채취·사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한번 채취한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순환사용이 극대화된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조기실현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기반 마련) 「자원순환사회전환 촉진법」을 제정(‘14년)하여 자원순환률 목표제를 도입, 채취한 자연자원·에너지의 선순환사회를 구축
  - 수거체계 개선 등으로 폐전자제품 재활용을 대폭 확대(‘12년 3kg/인→ ‘17년 4.5kg/인) 하고, 폐자동차 재활용 촉진 및 폐냉매 적정처리를 위한 폐자동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(‘13년)
  - 폐자원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믿고 사고 팔수 있는 ‘순환자원거래소’의 단계적 구축·운영, 안정적 원료공급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자원순환종합타운 조성(‘17년까지 7개소)
- ② (미처리 폐기물 매립 제로화 추진) 매립·소각비용이 재활용 비용을 상회하게 하여 재자원화를 유도하는 폐기물 매립·소각 처리부담제를 도입(‘14년)
  - \* 덴마크(’87년), 프랑스(’93년), 영국(’96년), 일본(’00년) 등에서 동 제도를 도입한 결과 생활폐기물의 무처리 매립 제로화가 사실상 실현
  -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 및 시설확충으로 에너지 자립에 기여(‘20년기준 원유5,700만배럴 대체)하고, 온실가스도 감축(온실가스 2,800만톤 감축)

## 추진전략 17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

---

- (106) 과거와의 화해를 위한 과거사 명예회복
- (107) 공직임용의 기회균등과 공평한 대우
- (108) 대화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
- (109) 공공갈등 관리 시스템 강화
- (110) 사회 통합적 인권보호 체계 구축
- (111)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





## 가. 과제개요

- ☐ 계층, 지역, 세대 간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공직임용의 기회균등과 공평한 대우 촉진

## 나. 주요 추진 계획

### ① 직무능력 중심 공직사회 구현

- 공직에 적합한 “직급별 직무능력 표준”을 개발하고 평가 기법과 전문인력 육성, 과장직위 진입 시에도 고위공무원과 같이 역량평가 의무화, 고위공무원에 대한 적격심사 시 부적격 기준 강화,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보직관리 개선

### ② 공직내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

-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비율을 ‘17년까지 15%로 확대, 과장급 직위에 여성이 없는 부처는 ‘13년중 1명 이상 임용, 각 부처 목표달성도를 정부업무평가 지표에 반영

### ③ 고졸·지역인재·장애인 채용 확대

- 고졸 지역 인재 추천채용 규모를 ‘13년 120명으로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추가 확대, 대졸 지역인재 채용 규모를 ‘17년까지 120명으로 단계적 확대, 중증장애인 채용직위 적극 발굴 및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

## 가. 과제개요

- ☐ 대화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통한 노사관계안정 및 일자리 창출 지원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사회적 대타협 등) 참여주체 확대, 논의의제 다양화 등 노사정 위원회 개편을 통한 실질적 사회적 대화 국민기구로의 정착 지원
  - 중앙 및 지방단위 노사정 대화채널을 활성화하고, 산업현장 단위 노사협의회의 적극적 역할 수행 지원
  - 범 국민적 참여와 역량 결집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이슈를 포괄하는 사회적 대타협 추진
- ② (신뢰와 상생의 노사관계 전환) 노사문제는 「법·질서 준수」, 「신뢰와 타협」 가치를 존중하면서 노사 자율 해결기조를 실천
  - 전근대적이고 불합리·불법행위 근절 및 위반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, 사회적 책임 실천 우수노사 발굴 및 모범사례 확산
    - \* 복수노조와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상황 평가 및 필요시 노사정간 합리적 보완방안 등 논의
- ③ (노동위원회 기능 강화) 현행 부당해고·부당노동행위 판정 등 기능 강화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 관련 노동분쟁 해결 지원
  - 판정·조정 전문성·신뢰도 및 서비스 수준 제고
    - \* 상임위원 보강 및 현장방문을 통한 순회심판·조정 제도 도입, 참여위원의 행위규범 강화 및 회피제도 도입, 사건배정시스템 개선 등 운영체제 개선

## 가. 과제개요

- 국가의 정책·사업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
  - 참여적 갈등예방·관리에 대한 부처의 인식 및 역량 제고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공공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활성화
  - 각 부처별로 외부전문가 중심의 갈등관리 심의회 구성·운영
  - 총리실은 각 부처 갈등관리를 수시 점검·평가
- ② 중요 갈등현안의 집중 관리 및 조기 해소
  - 중요 갈등현안 선정후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집중관리
  - 「주요 공공갈등과제 관리방안」 마련 등 부처 갈등현안 관리 강화
- ③ 갈등관리 역량 강화 및 인프라 확충
  - 관련 정책·법령·제도 등에 대한 조사연구,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·운영
  - 부처·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갈등관리 교육 및 현장 갈등당사자 중심의 합동세미나 실시
  - 주요 갈등현황, 사례, 전문가 및 관련단체, 연구자료, 해외사례 등의 갈등관리 종합DB 구축·운영

### 가. 과제개요

- 3불 시대(불안, 불만, 불신)의 젊은 세대, 사회적 약자 및 소외 계층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통해 사회대통합과 인권선도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 확립
  -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호에 관한 국가인권정책기본 계획의 이행·점검을 내실화하고, 그 추진체계를 강화
  -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일반법 제정을 추진하고, 특히 취약계층인 시설수용자에 대한 인신보호 강화

#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강화) 가칭 “국가인권정책기본법” 제정으로 인권정책 추진체계를 법제화하여 인권에 관한 시스템 강화
  - 새 정부의 주요 인권정책 과제를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(‘12-’ 16)에 반영하고,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을 운영하여 기본계획의 이행에 관한 실질적 점검 및 분석 추진
- ② (차별금지법 제정 추진)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일반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여,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
- ③ (인신보호관 제도 도입) 인신보호법을 개정하여, 정신보건시설 수용자 등의 위법 수용 여부를 확인하고 법원에 대한 인신보호 청구 단계부터 지원·대리할 수 있는 ‘인신보호관’ 제도 도입

## 가. 과제개요

- ☐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정착 및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·보급 등 스펙보다 실력과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스펙초월 채용시스템 정착)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를 통해 열정·잠재력을 지닌 청년을 선발, 멘토의 도제식 멘토링 및 청년인재은행 DB 등록 등을 통한 취업 지원
  - \* 공공기관 중심으로 선도, 모범사례 발굴 등을 통해 민간부문에 확산
- ② (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) 협업형 개발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직무능력표준 조기 개발('13 ~ '14년)
  - 교육훈련과정 및 자격시험 출제기준 개편, 「일-교육훈련-자격」이 연계된 「과정이수형 자격제도」 도입
    - \* 장기적으로 자격과 학위, 교육·훈련, 직무경력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국가 직업자격체계(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) 구축
- ③ (직무능력평가제 도입) 신규채용시 직무역량을 중심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직무역량평가 모델 개발·보급
- ④ (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) 현장 수요에 맞는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개편 및 재직근로자의 일·학습 병행 지원 기반 조성
  - 생애주기별 숙련향상 지원 및 원활한 노동시장 재진입 촉진
    - \* 1:1 멘토링 등에 기반한 「숙련진단-맞춤형 직업능력개발·취·창업 지원 프로그램」을 마련하고, 관련 추진체계 구축\*
  - 중앙·권역별 인력·숙련수요 전망을 토대로 인력수요를 파악하고, 인력양성사업을 통합·지원

## **추진전략 18**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

---

(112)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

(113) 지방대학 지원 확대

(114)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성 강화

(115)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·지역공동체 활성화

(116)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 제고



## 가. 과제개요

- 도시권 중심의 지역발전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여 국토균형발전 도모
  - 산업기능 중심의 기존 지역정책을 보완하여 경제권과 도시 생활권을 연계하는 주민체감형 국토발전정책 추진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지방거점도시의 지역중추도시권 육성) 10+ $\alpha$  중추도시권에 도시규모·특성 등을 고려한 도시권별 맞춤형 발전전략 추진
  - 도시권 육성을 위하여 맞춤형 도시재생, 신성장동력 발굴, 국민행복 생활인프라 등 핵심 프로젝트 발굴·지원
- ② (세종시 조성) 세종시 기반시설을 적기에 조성하고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및 과학벨트 연계발전 등 추진
- ③ (산업단지) 지역 특화산단을 개발하고, 노후산단 재생 추진
  - 식품, 항공 등 지방 중소특화산단을 개발하고 기반시설 지원
  - 노후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개선 등 재생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‘행복한 산단 만들기 사업’과 연계하여 업종재편
- ④ (동서통합지대 조성) 섬진강 인근에 영호남간 문화교류, 연계 교통망 확충 등 동서화합과 남부경제권의 성장거점 육성
- ⑤ 지역발전위원회 역할 강화 등 지역 개발 추진체계 개편

## 가. 과제개요

- ☐ 지방대학 특성화 및 지원 확대, 지방 대학생 채용할당제 등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육성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지방거점대학 육성) 지방대학 특성화를 위한 집중 투자를 통해 지역대학을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육성
  - 지역대학이 소재 지역의 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 거점이 되도록 ‘(가칭)지역거점대학 육성사업’ 추진
  - ‘산학협력선도대학(LINC) 사업’을 통해 현장적합성 높은 인력양성, 대학 특성화 및 지역산업과의 동반성장 견인
  - 지방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및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(ACE) 사업 개선을 통해 학부학과 특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지원비율 확대
  - 대학 평가시 지역대학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방식을 도입하고, 컨설팅 방식을 개선하여 지역대학 특성화와 구조개선 촉진
- ② (지방대학 특성화 촉진) 지방대학의 강점분야 및 지역별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대학의 구조개혁을 촉진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 있는 학부·학과특성화에 집중 투자
  - 지방대학의 경쟁력있는 단과대학, 학부, 학과 특성화를 집중 지원하는 ‘지방대학 특성화 사업’ 추진

## 가. 과제개요

- ☐ 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건전성 강화

## 나. 주요 추진 계획

### 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비중 확대

- 지방소비세 인상 등 지방세 비중을 지속 확대하고 이전재원을 축소해 재정자립도를 높임
- 취득세 중심에서 지방소비세·지방소득세 중심으로 개편, 비과세 감면 축소, 체납징수율 제고, 세외수입 관리체계 강화

### ②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

- 보통교부세 산정시 지역발전 정도 등에 따라 수입산정 차등화, 특별재정보전금 폐지, 분권교부세는 지방교부세와 통합하고 현 사업 대부분은 지방사무로 전환

### ③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

- 지방채무 및 지출관리 강화, 자치단체·지방교육재정·지방공기업 등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산출, 중앙 투·융자 사전심사대상 확대, 재정공시 확대 및 사업별 원가정보 공개, 입찰·계약 전 과정 공개 의무화, 지방공기업과 출자·출연기관의 체계적 관리

## 가. 과제개요

- 지방이 진정한 ‘국정운영의 파트너’가 되는 국정운영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방분권 강화 및 상생협력 체계 구축
-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시민사회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자본 구축

## 나. 주요 추진 계획

### ① 지방분권 강화

- 지방분권 추진체계 및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이 주도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
  - 국가와 지방사무의 명확한 구분을 위한 「지방자치법」 개정(‘13)
  - 주요정책에 대한 중앙-지방간 충분한 협의 및 상호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제도화

### ② 시민사회·지역공동체 활성화

- 정부-시민단체간 협력 강화, 주민자치회 중심 지역공동체사업 추진,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의 내실화, 시민단체의 자생력 강화 및 나눔활동 활성화

### 가. 과제개요

- 지역사업 지원의 비효율성과 복잡한 사업구조 개선 등을 통해 기업·인재의 수도권 집중 등 불균형 현상을 지속 완화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력 제고
  - 지역사업구조 단순화, 지역 자율성과 연계성 강화, 행복산업 단지 조성사업 확산 및 지역특구제도의 내실화 추진

#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산업 재정비) 기존 지역사업을 일자리·지역유망기업 지원중심으로 재편\*하며, 지역인재 양성 활성화
  - \* 광역선도사업은 지역간연계협력 중심으로, 신탁화사업은 시도 주도 기업생태계 지원사업으로 발전
- ② (지역투자여건 개선) 정부-지자체-기업간 투자 협약 도입,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 개편('13.1분기) 및 지역별 '투자애로타개회의'를 통해 지역경제 및 일자리 기여도가 큰 프로젝트 지원
- ③ (지자체의 자율성과 연계성 확대) 지자체별 발전계획 수립·사업집행의 자율성·책임성을 확대
  - 지역발전위원회의 사업조정기능을 강화하고, 지방중기청이 지역일자리창출의 중심이 되도록 하며, 시도별 테크노파크와 혁신도시 등 성장거점 조성사업간 연계협력도 강화
- ④ (지역특구제도 정비) 각종 특구의 신규지정은 신중히 검토하고 중복 지정된 지역의 구조조정, 인센티브 차별화 등으로 특구제도 내실화 추진('13년중 연구용역을 거쳐 연말까지 정비방안 마련)



## 국정목표 5

### -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
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추진전략 19 .....         | 179 |
|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   |     |
| 추진전략 20 .....         | 189 |
|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|     |
| 추진전략 21 .....         | 195 |
| 국민과 함께 하는 신뢰외교 전개     |     |



## 추진전략 19 **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**

- (117)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
- (118)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
- (119) 한미군사동맹 지속적 발전 및 주변국 국방협력 강화
- (120) 혁신적 국방경영 및 국방과학기술 발전
- (121) 보람있는 군복무 및 국민존중의 국방정책 추진
- (122) 명예로운 보훈
- (123) 북핵문제의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



## 가. 과제개요

- ☐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태세와 능력을 갖추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완벽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구축) 완벽한 국지전 및 전면전 수행체계를 구축하고 적 도발대비 계획 및 위기관리 수행체계를 발전시키며, 적 도발징후를 조기에 식별하고 도발시 단호한 응징 및 추가도발 의지를 분쇄
- ② (능동적 억제전략을 통한 적극방위능력 확보) 능동적 억제전략 개념을 발전시키고 북 핵·미사일 시설 타격을 위한 통합체계 구축
- ③ (민·관·군·경 통합방위 및 테러대비태세 강화) 정부와 지자체의 통합방위 및 비상대비 조직을 강화하고, 민·관·군·경 단일화된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
- ④ (군 정신전력 강화) 군의 확고한 가치관을 확립하고, 정신전력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교관 육성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며, 신세대 장병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을 확대
- ⑤ (사이버전 대응능력 강화) 북한군의 사이버전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고, 국가사이버전 수행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여 대응체계를 발전시키며, 사이버전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등 사이버전 수행능력을 확충
- ⑥ (국가·국방 위기관리태세 강화) 국가위기관리체계와 연계한 국방위기관리태세를 확립하고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네트워킹과 민간 협력체제를 구축

## 가. 과제개요

- 전략환경 변화와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처 가능한 전방위 대비 방위역량을 구축하여 주권·안보를 수호하고 평화·안정을 보장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국방개혁 보완 및 발전) 향후 5년간 추진할 국방개혁과제를 조기에 식별하여 추진하고, 새롭게 발전시키는 군사전략과 전작권 전환 및 상부지휘구조 개편(안) 보완을 고려하여 군구조 개편계획을 발전
- ② (적정수준의 국방예산 확보) 안보에 대한 새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국가재정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의 국방예산 증액
- ③ (국방획득체계 개선) 방위사업청의 일부 기능(정책, 계획수립, 평가 등)을 국방부로 이관하여 방위사업청은 집행기능을 전담 토록하고, ADD·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부 관리 강화
- ④ (주요 방위력 개선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) 차기전투기 확보 등 주요 핵심전력 사업이 적기에 전력화 되도록 추진하고, 제주 민·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을 적기에 완료
- ⑤ (맞춤형 확장억제능력 강화) 확장억제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북핵위협 대비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, 한반도 전략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억제전략 개발 및 연습 강화
- ⑥ (북한의 미사일 위협 대비 타격능력 증강 및 한국형 방어체계 구축) 개정된 미사일 지침에 따라 미사일 능력을 확충하면서, 실질적인 타격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Kill Chain을 구축하고, 적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발전
- ⑦ (국방우주력 발전 추진) ‘국가우주개발진흥법’ 개정 등 법적·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, 국방우주전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며, 전문 인력관리체계 정립 등 국방우주력 운영체계 발전
- ⑧ (감시·정찰 능력 단계적 확대) 군 정찰위성 및 중·고고도 UAV 전력화로 감시능력을 강화하고 제대별 정보조직 창설 및 자산을 확보하며, 정보 전문인력 확충 및 전술제대 정보능력을 보장

## 가. 과제개요

-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 능력을 강화하고, 우리 안보에 유리한 전략환경 조성 및 국가간 갈등 예방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한·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·발전) ‘한미동맹 국방비전 2030’을 발전시키고, 한미동맹 6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며, 한미간 정례협의체를 지속 발전
- ② (전작권 전환 정상 추진 및 新연합방위체제 구축) ‘전략동맹 2015’에 근거하여 식별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, 한국군 주도의 단일 전구사령부 구성 및 연합전투참모단을 운영
- ③ (주변국들과 양자·다자 국방협력 강화) 주변국(일·중·러)과 이미 구축된 교류협력 채널을 활성화하고, 역내 다자안보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주도적인 역할 수행
- ④ (국제평화유지 활동 발전) 다국적 평화활동·군사교류협력 파병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국제평화유지군 참여를 확대
- ⑤ (서울안보대화 확대·발전) 현재 참가중인 15개국·2개 국제기구를 23개국·3개 국제기구로 확대하고, 각국 고위급 대표 및 저명한 민간 안보전문가 참가를 통해 다자간 안보대화체로서의 위상을 확보

## 가. 과제개요

- 국방경영의 효율화 및 군의 전투임무수행을 보장하고,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방위산업의 창조경제 전략산업화 달성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미래지향적 국방경영 혁신의 지속 추진)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‘국방경영기획 평가단’을 상시 운영하고, KIDA ‘경상사업 분석단(가칭)’을 활용하여 예산 전 과정의 합리성을 제고
- ② (전투근무지원 분야의 민간 개방 확대) 민간자원을 활용한 전투근무지원 분야 전담관리 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하고, 민간자원 활용을 통해 절감한 군 인력을 전투부대에 재배치
- ③ (선진 국방정보화 환경 구축 및 발전)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정보자원관리를 위한 ‘국방통합정보관리소’를 구축하고, 합동전력복합체계에 대한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인증체계를 시행하며, IT신기술의 軍 적기 도입을 위한 민·관·군 협력을 강화
- ④ (창조형 R&D 추진 및 방위산업 활성화) 국방 R&D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, ADD를 세계적인 국방과학기술 연구기관으로 육성하며, 무인·로봇 등을 활용한 신무기체계 투자 확대, 국방획득체계 개선과 연계한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설립 및 방산수출 인프라 확대를 추진

## 가. 과제개요

-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고, 병 복무기간을 단축하며, 국방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군대상 구현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병 봉급 인상 및 장병복지 획기적 증진) 병 봉급 인상, 장병 의식주 개선, 문화시설 확충, 의료지원체계 개선 등 장병 복지 및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향상.
- ② (생산적 군 복무 및 군 복무경험의 사회적 보상 확대) 원격강좌 참여대학을 확대하고, 학점취득 상한 확대를 위한 관련법령을 개정하며,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 경력을 공무수행경력으로 인정하는 등 병역이행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확대
- ③ (우수인력 획득 및 간부 위상 제고를 통한 복무의욕 고취)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비율 확대와 직업군인의 정년연장 검토, 부사관 학군단 신설 및 부사관 위상 제고 등을 통한 우수인력 획득 및 복무의욕 고취
- ④ (병 복무기간 단축) 단축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중·장기적으로 추진하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
- ⑤ (사회적 관심자원의 병역을 집중 관리) 병역사항 집중관리를 위해 병역법을 개정하고, 전산시스템 및 D/B를 구축하며, 업무수행을 위한 직제를 편성
- ⑥ (민·군 상생 개념의 국방 규제 개선)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조정 및 제도 개선을 추진
- ⑦ (군 공항 이전 및 소음대책 추진) 「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및 하위법령, 「군 소음 대책법」 및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법령에 따라 이전·소음대책사업을 추진

## 가. 과제개요

- ☐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 제대군인의 일자리를 확보하여,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이 명예로운 사회 달성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국가유공자 보상과 복지강화
  - 참전명예수당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, 무공영예수당은 참전 명예수당과 연동하여 인상 추진
- ② 국가유공자 의료·요양 등 복지서비스 확대
  - 국가유공자 의료·요양서비스 점진적 확대 : 인천보훈병원 추진 검토
- ③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 및 지원조직 확대
  - 제대군인지원센터 지원조직을 강화하고, 장기적으로는 제대군인 인력개발원을 설립하여 제대군인지원센터 기능 흡수 및 통합
  - 범정부적 제대군인 일자리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, 국방부·행안부 등 관계부처간 유기적 협조시스템 구축
- ④ 정전 60주년 국제적 기념사업
  - 정전 협정(7.27) 60주년 행사를 UN참전 21개국 정부대표 초청 등 정부 주관의 국제적 행사로 추진
- ⑤ 국군포로 문제 해결 및 6·25 전사자 유해발굴 확대
- ⑥ 예비군훈련 수당의 현실화
- ⑦ 경찰 및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

## 가. 과제개요

- ☐ 북한 핵실험에 대한 엄중한 대응과 함께 남북간 협의 및 미국·중국 등 6자회담 관련국들과 조율을 거쳐 큰 틀에서 비핵화 해결 모색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### ① 북핵 실험 대응 관련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

- 북한 핵실험에 대한 UN 안보리 대응 과정에서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, 안보리 결의 등 북한의 국제의무 준수를 위해 국제 사회와 공조 강화

### ② 비핵화 프로세스 재개 여건 조성

- 미·중 등 관련국과의 조율을 거쳐 비핵화 협상 여건 조성 추진

### ③ 남북간 협의 추진

-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간 실질적 협의 추진을 통해 6자회담 등 비핵화 협상에 동력 주입

### ④ 한미중 3자 전략대화 단계적 가동 및 국제사회와 협력 확대

- 한미중 3자 전략대화를 단계적으로 가동하여 3국간 신뢰구축이 북핵 문제 해결에 추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, 유엔, EU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확대

### ⑤ 6자회담 재개 및 비핵화 프로세스 진전



## 추진전략 20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

(124)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

(125)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

(126) 통일 대비 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 준비



## 가. 과제개요

- 남북간 신뢰형성을 통한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, 발전
  - 단기적으로 억지와 안보를 강화하되,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 정상화 및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※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강력한 억지에 기초한 대북정책이지 단순한 유화정책이 아님. ‘손백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’는 말처럼 쌍방이 함께 노력할 때만 원활히 가동될 수 있음.(2.13, 당선인 말씀)

- ① (인도적 문제 해결 추진) 영유아·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 순수 인도적 지원(UN제재 非대상)은 정치·안보 상황과 구분하여 국제기구와 협의하에 시기 및 방식 검토
    -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·납북자 문제 해결에도 노력
  - ② (대화채널 개설 및 기존 합의정신 실천)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국제정세, 북한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서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, 핵문제 등 현안 문제 해결 추진
    - 남북간 합의는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원칙 견지, 추가 합의는 합의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진
  - ③ (호혜적 교류협력 활성화) 북핵상황 진전 등을 고려하면서, 개성공단 국제화, 경제·사회문화 교류 내실화 모색
    - 서울·평양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문제는 여건을 감안 검토
- \* 남북간 신뢰와 북핵문제 진전에 따라 「비전 코리아 프로젝트」 추진
- ④ (정치·군사적 신뢰구축 및 교류협력의 상호 보완적 발전) 도발 중지 등 기본적 조치부터 시작, 정치·군사적 신뢰구축과 교류협력 진전을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있게 추진

## 가. 과제개요

- ☐ 통일비전을 재정립하고, 경제·환경 공동체 등을 추진함으로써 행복한 통일의 기반을 조성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「그린 데탕트」를 통한 환경공동체 건설) 북핵 상황 진전을 감안하면서 남북 환경공동체 건설 추진
  - 녹색 경제협력, 접경지역·DMZ·백두산 화산 등 분야별 공동 연구, 개성공단내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등 모색
- ② (북한 인권 개선 등을 통한 ‘행복한 통일’ 여건 조성) 북한 인권법 제정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대내외 환경 조성
  - 민간단체·국제사회와의 협조를 통하여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및 인도주의적 협력 모색
- ③ (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) 남북간 신뢰와 비핵화 진전에 따라 「비전 코리아 프로젝트」 등을 통한 경제공동체 건설 추진
  - 중장기적으로 철도·도로, 전력, 통신 등 산업인프라 단계적 연결을 포함해서 검토
- ④ (민족공동체통일방안 계승·발전)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계승 및 발전방향 공론화
  - 학술연구,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발전 방안 검토

## 가. 과제개요

- 국내외 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준비 역량 강화
  - 통일·대북 정책에 대한 국론 통합 및 국제적 지지 확보
  - 인적·물적·제도적 역량을 확충, 통일준비 내실화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탈북민 맞춤형 정착지원 발전) 탈북민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·의료 지원 강화
  - 탈북민 재교육 확대, 젊은 세대 대상 집중적 교육지원으로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통일 미래의 역군으로 육성
  - 「탈북민 문화센터」 건립, 탈북민간 소통의 허브로 활용
- ② (실질적 통일 준비 역량 강화) 유관기관간 통일대비 협조체계 강화
  - 통일재원 마련 법제화 적극 검토
  - 국내외 통일·북한 관련 연구기관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, 균형있는 교육 콘텐츠 개발
- ③ (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공감대 확산) 주변국을 대상으로 정부·민간이 협력하는 ‘1.5 트랙 협의체’를 구축·운영
  - 재외동포 대상으로 「한민족 통일 네트워크 구축사업」 추진



- (127)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확대
- (128) 한미동맹과 한중동반자 관계의 조화·발전 및 한일 관계 안정화
- (129) 신흥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산업자원 협력 강화
- (130)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중견국 실현
- (131) 재외국민 안전·권익 보호와 공공외교·일자리 외교 확대
- (132) FTA 네트워크 등 경제협력 역량 강화
- (133) ODA 지속확대 및 모범적·통합적 개발협력 추진



## 가. 과제개요

- 동북아 양자 갈등구조를 다자간 상호협력의 틀로 완화, 유라시아 협력과 연동시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신뢰구축 및 경제협력을 병행 추진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추진) 「동북아 평화협력 구상」(서울 프로세스) 추진을 통한 신뢰구축 및 새로운 질서 창출
  - △테러·마약 △에너지·물류·환경 △인도주의·재난대응 등 협력이 용이한 비전통적 안보 분야부터 추진
  - ‘동북아 평화·협력을 위한 고위급 회의’ 개최 추진
    - 초기에는 기존 다자회의 계기에 개최하고, 참가국간 신뢰구축 정도에 따라 별도 회의를 개최하는 등 동북아 평화협력 제도화 추진
- ② (북방 3각협력 추진) 남북러 및 남북중 3각 협력 추진을 통해 동북아 평화협력과 유라시아 외교 추진에 추동력 확보
- ③ (유라시아 3각협력 추진) ASEAN(남아시아 포함) 및 EU(중앙아 포함)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유라시아 3각협력 구도 강화
  - △한·EU 정례 정상회담, △한·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(SAARC) 외교장관회의, △한-중앙아 협력 포럼 활성화 및 한-중앙아 정상회의 개최 등 추진

## 가. 과제개요

- ☐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 발전시키고,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며, 한일관계의 안정화 추진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### ① 한미간 현안 해결

- 한미원자력 협력 협정,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등 한미간 당면 현안의 원만한 해결

### ② 한미 동맹 심화·발전

- 한미동맹 60주년(2013년)을 계기로 21세기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 발전

### ③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

- 한중 경제관계 발전에 상응하는 정치안보 협력관계 발전을 추진하고, 한중 민간차원에서의 교류 협력 증진

### ④ 한미중 3자 전략대화의 단계적 가동

- 기존 민간/민관 대화체를 통한 협력 축적 후 정부간 대화체로 격상

### ⑤ 한일관계 안정화

- 영토 문제는 역사 문제 차원에서 원칙에 입각하여 단호히 대응하되, 호혜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병행

## 가. 과제개요

- BRICs 등 신흥국 대형 프로젝트 시장 선점과 새로운 수출 동력화를 위해 정부·산업간 협력 및 효율적 수주지원체제 구축

\* '17년까지 전세계 시스템재 프로젝트 시장 약 10%(1,300억불) 점유 추진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산업개발경험 전수) 베트남, UAE, 모잠비크 등 플랜트·원전·자원개발 유망국에 산업·에너지자원 기술 등을 이전하기 위한 현지기술센터 구축, 퇴직전문가 파견, 적정기술보급 등 추진

\* ISP(Industrial capability Sharing Program): 신흥국의 자생적 산업발전 역량구축 지원

- ② (프로젝트 수주 주기별 지원 체계화) 사업기획 및 타당성검토(F/S) 지원확대, 전략국가별 친한 유력인사 DB 구축 및 정상간 경제외교 지속

- 산업·자원협력위(총 66개) 등 정부간 협력채널 운영 및 대형 프로젝트 독점권 확보를 위해 정부간협정(IGA) 체결

- 중소·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및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취약한 프로젝트 기획·개발 및 금융조달능력 적극 보완

- ③ (프로젝트 금융 애로해소) 해외 유망프로젝트 대상으로 중동·싱가폴 등의 국부펀드와 연계한 투자자금 조달지원 추진

\* 투자설명회, 자원통상협력, 패키지지원 및 기술지원 제안 등

- 세계은행(WB) 등 다자개발은행(MDB)과의 협력 강화

## 가. 과제개요

- 글로벌 경제문제 해결 기여,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 내실화, 모범적·통합적 개발협력 등을 통해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의 위상 정립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글로벌 경제문제 해결 적극 기여) G20, APEC, OECD 등 다자협의체에 적극 참여·기여하고, 개발·녹색성장 등 우리 주도 의제 관련 중견국간 협력 선도
  - GCF 사무국 유치 후속조치, GGGI 및 GTC와의 협력주도 등 기후변화·환경·에너지 문제 등 해결에 선도적 역할 수행
  - 개도국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모범적·통합적 개발협력 추진
- ② (세계 평화에 대한 기여 확대) UN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수임(2013-14년)을 계기로 UN PKO 기여 확대, 핵안보·인권·사이버 범죄 대응 등 세계평화와 글로벌 문제 해결에 적극 기여
- ③ (인적, 문화적 교류 확대) 국제기구내 우리 국민 진출 증대, 글로벌 청년 프로젝트 확대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인적기여 증대

## 가. 과제개요

- 해외 체류 국민의 안전과 권익보호, 국민의 참여와 창안 통한 공공외교 강화 및 젊은 세대들의 일자리 창출 외교 추진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재외국민 안전과 권익보호 강화 및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)  
‘국민행복 영사서비스’ 프로젝트 가동을 통한 양질의 영사 서비스 제공 및 700만 재외동포 역량 결집을 위한 ‘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’ 강화
  - EBS와 협조하 차세대 재외동포 대상 한글교육 및 우리 역사·문화 교육의 혁신적 개선
- ② (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추진) 일관된 전략하에 국민이 참여하는 공공외교를 추진하여 우리의 경험·문화·지식을 체계적 전파
- ③ (글로벌 청년 프로젝트 추진) ‘글로벌 청년 프로젝트’를 통한 젊은 세대의 해외진출 적극 확대
  - 젊은이들이 직접 개발협력에 참여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 및 훈련을 체계화하고 파견 확대
  - 지자체, 지방대 등과 협력, 상대적 소외계층, 젊은 지방인재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·교육 체계 확충
  - 청년 인재들의 국제기구 진출 및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고, 개도국 문화꿈나무, 청년공공외교단 등을 통해 매력한국 전파

## 가. 과제개요

- 동아시아 역내국가 및 신흥 시장국과의 FTA 네트워크 구축, 신흥경제권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시장창출 및 성장동력 확보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FTA 네트워크) 동아시아 역내통합을 주도하고, 주요 전략국 및 자원 부국과의 FTA 추진으로 글로벌 FTA 네트워크 강화
  - 한중일 3국의 산업구조, 동태적 산업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한중 및 한중일 FTA를 추진하되, 농수산업·중소기업 등 민감 분야를 보호
  - RCEP(역내 포괄적 경제협정) 등 다자간 지역경제통합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TPP(환태평양 자유무역협정) 등 아태 경제통합 논의도 면밀하게 검토
    - \* RCEP 참여국 : ASEAN(주도) + 6 (한중일, 호주, 뉴질랜드, 인도)
    - \* TPP : 미국(주도)포함, 환태평양 11개국(호주, 뉴질랜드, 캐나다등) 참여
  - 인도네시아, 베트남, 호주 등 주요국과의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동 등 자원부국과의 FTA 추진 여건 조성
- ② (신흥국 경제협력) 중동·동남아·중남미 등 신흥경제권별로 경제협력목표와 중점협력국가를 선정하여 종합적인 협력 추진
  - 중동의 신산업·인프라 프로젝트 및 이라크·리비아 등 재건 프로젝트 적극 진출
  - KSP(경제개발경험공유사업) 등을 활용하여 멕시코, 브라질, 미얀마 등 핵심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확대
  - '13년 북극이사회 옵저버 진출을 통해 북극항로 개발 참여

## 가. 과제개요

- ODA 규모 지속 확대 및 모범적·통합적 개발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수원국(受援國)의 자립역량 배양 및 지속가능 발전을 지원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ODA 규모 지속 확대) 2015년까지 ODA/GNI 비율 0.25%를 목표로 추진하고, 2016년 이후 규모 등을 포함한 「제2차 ODA 기본계획(2016~2020)」 수립
- ② (ODA 통합 추진체계 공고화)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의 통합적 추진체계 및 관계기관 간 연계·협력 강화
- ③ (수원국 중심의 효율적 ODA 추진방식 확립) 중점협력국 조정 및 국가협력전략 수립·개선을 통해 ODA 자원·역량을 집중
- ④ (개발협력 글로벌 인재 양성) 해외봉사단·ODA 청년인턴 사업·주니어 컨설턴트 제도 등을 활성화하고, 맞춤형 ODA 교육 확대
- ⑤ (ODA 투명성 및 소통 강화로 국민신뢰 및 지지 확대) ODA 정보제공 확대, 시민사회와의 정책대화 등 소통 활성화



## 추진 기반

### - 신뢰받는 정부
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추진전략 1 .....           | 207 |
| 개방·공유·협력을 통한 정부 3.0 달성 |     |

|     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|
| 추진전략 2 .....    | 213 |
|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 |     |



## 추진전략 1

## 개방과 공유를 통한 정부 3.0 달성

(134)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.0 구현

(135) 세종시 조기정착을 통한 정부효율 극대화

(136)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등 합리화

(137)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및 규제합리화



## 가. 과제개요

- ☐ 개방·공유 및 협업·소통을 통해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정부 실현

## 나. 주요 추진 계획

### ① 공공정보 개방·공유 확대 및 민·관 협치 강화

- 공공기관 정보 공개 확대(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), 공공정보 개방 및 이용 활성화(공공정보의 민간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),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 미래전략 및 위기대응전략 수립

### ② 소통·협업을 통한 부처간 칸막이 제거

- 정부통합전산센터를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로 전환, 정부통합 의사소통시스템 구축 및 융합행정 활성화, 범정부 지식경영 시스템 구축

### ③ 개인별·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

- 행정서비스를 수혜자 유형기준으로 재분류한 ‘행정서비스맵’ 제작, 생애주기별·수혜자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

### ④ 정부3.0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공직문화 창달

- 인사교류 확대 및 소통협업 확대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, 스마트 행정효율성 관리지표 개발·운영 등 성과관리 강화, 세종시 이전에 따른 종합대책 수립으로 디지털 협업문화 확산

## 가. 과제개요

- 정부통합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으로 부처내·부처간 협업 활성화 및 세종시 이전공무원의 정착 지원과 도시자족기능 확충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### ① 정부내 협업시스템 강화

- 부처 예산요구 및 법제심사 시 협업체계 구축여부 심사, 정부업무평가지 부처간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여부 등을 평가
- 정부통합 의사소통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,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및 결제·메일·업무포털 등 모바일서비스 확대
- 세종시지원위원회를 통한 각 부처 이행상황 지속 점검·관리, 디지털 협업시스템 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·홍보
- 국회와 협의하여 행정부 공무원을 위한 국회내 사무공간 확충 및 대국회 업무의 운영 효율화 추진

### ② 세종시 정주환경 개선

- 주택 특별공급 지속 추진, 임대주택 확보 추진
-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 편의 제고, 광역교통망 확충, 대중교통 지속 개선, 교통수단간 체계적 환승시스템 조기 구축
- IT 기반의 최첨단 스마트학교 조성, 중·대형병원 조기 유치 방안 강구
- 생활편의시설 입점 및 문화시설 적극 유치

## 가. 과제개요

- ☐ 공공기관의 임원인사제도, 경영평가제도, 재무건전성 등을 개선하여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강화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인사제도 개선)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시 전문자격 요건 강화 등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
  -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주무부처·공공기관 경영진·임명권자의 간섭 배제
  - 기관장, 감사 등 임원직위별 자격기준의 구체화로 낙하산 인사논란 불식 및 임원 임기 개선
- ② (경영평가제도 개선)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경영성과협약제로 전환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과중심의 책임경영 강화
  - 기관장 경영계약제의 계약 내용을 구체화·계량화하여 경영성과협약제로 발전시키고, 경영성과협약은 3년 단위로 평가하여 연임여부 등에 반영
- ③ (재정투명성 강화) 공기업 부채에 대해서는 사업별 구분회계 제도를 도입하고, 대형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및 사후 심층평가 제도를 도입
  - 부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별 구분회계 제도 도입 방안 시범실시
  - 현행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제도 수준으로 내실화하는 한편,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영성과를 참고하여 사후 심층평가제도 도입 추진

## 가. 과제개요

- ☐ 기존 규제의 합리적 개선, 불합리한 규제의 도입 억제 등을 통해 부적절한 규제를 철폐하고 규제의 품질을 향상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### ① 불합리한 규제 생성을 시스템적으로 억제

- 신설·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심사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부담 형평성\* 검토를 의무화하여 규제의 합리적 신설을 유도

\* 동일 규제준수비용이라도 중소기업의 체감부담이 대기업보다 큰 점 고려

- 규제심사 매뉴얼을 개정하여 각 부처에 설치된 자체규제개혁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

### ② 핵심 규제개혁 추진과제 발굴 및 개선 추진

- 국정운영방향에 부합하도록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회복, 안전사회 조성 및 국민불편 해소 등의 중점 추진분야를 두고 개선대상 과제 적극 발굴
-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음부즈만 등 규제개혁 관련기관들이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운영실태와 업무성과를 수시로 점검·지원

## 추진전략 2

##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

---

(138)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

(139)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

(140) 지하경제 양성화 등 조세정의 확립



## 가. 과제개요

-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부정부패 근절 및 부당한 알선·청탁, 금품수수 등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 타파
- 공직기강 관련기관간 칸막이 제거 및 효율적인 공조체제 구축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### ① 특별감찰관제 도입

-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제 신설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「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부패방지법」의 제정 추진

### ②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익추구 금지

- 재산등록 대상자 확대 등 공직자재산등록제도 보완, 퇴직자 취업심사 강화
- 정보공개 대상기관 확대 및 원문공개 등 추진,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있는 직무수행 금지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
- 건설·하도급 등 구조적·반복적 비리 분야에 대한 기획점검 강화, 부처·기관 스스로 관행적 비리를 발굴·개선토록 유도

### ③ 부패방지기관간 협업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

- 감사원 등 공직부패방지 관련기관간 역할분담 강화, 교차감사 및 합동감사 확대 실시로 감사중복 최소화

### ④ 자체감사기구 운영 내실화

- 자체감사 책임자의 자격요건 강화,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책임자 임명시 지방의회 동의를 거치는 방안 도입

## 가. 과제개요

- ☐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중립성과 독립성이 충실히 보장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제도 정비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제도 확립)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충실히 보장되도록 인사제도 개선
  - 검사장급 보직의 적정 규모, 감축 필요성 등을 분석하여 보직 감축 추진
  - 부장검사 승진심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추가적으로 개최하는 등 검찰인사위원회 운영 실질화
  - 인력과 조직 진단을 통해, 법무부 및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를 단계적·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방안 추진
- ② (감찰·징계 및 적격심사 강화) 내부비리 발생을 예방하는 시스템 도입을 통해 청렴성 제고 추진
  - 감찰 조직과 인력 대폭 확충, 징계절차 간소화·징계 수위 강화 등 징계제도 개선 및 감찰 직원의 외부채용 방안 검토
  - 검사적격심사 기간을 단축하여 부적격 검사 조기 퇴출
- ③ (검찰 권한 재편)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, 효율성 및 민주적 정당성 강화
  - 대검 중수부 폐지와 함께 일선 부정부패 수사활동을 총괄, 지휘 및 지원하는 부서 신설, 부정부패 수사 공백을 방지
  - 중요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,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 준하는 위원 구성 및 중요사건에 대한 의무적 심의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제화 검토
- ④ (검·경의 합리적 역할 정립) 국민의 편익 관점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국가 수사시스템 설계

## 가. 과제개요

- 지하경제 양성화와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도록 세제·세정을 운영하여 직접적 증세없이 복지재원의 조달과 조세정의 확립

## 나. 주요 추진계획

- ① (지하경제 양성화 추진) 국세청에 T/F를 구성하여 핵심 추진과제 선정, 인프라 구축, 제도개선 등을 수립·집행
  - 가짜석유 등 거래문란 업종, 차명재산 은닉·비자금 조성 등 지하경제 형성거래, 고액 현금거래 탈루 자영업, 국부유출 역외 탈세 등에 대한 조사강화
- ② (과세인프라 확충과 제도개선) 금융정보분석원(FIU) 금융자료를 지하경제 양성화와 체납징수에 활용·강화
  - 현금영수증·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, 적격증빙 검증 시스템 구축 등 실물거래 과세인프라의 개선
  - 블랙마켓 단속 강화를 위해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등 관련법 위반행위 단속 공무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 부여
- ③ (조세지원제도 재편) 도입취지·소득재분배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감면제도를 소득공제 중심에서 세액공제 방식을 확대
  - 장애인·노인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지원세제 개선추진
  - 대·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기업이 23차 협력업체에 투자하는 경우 추가 세제지원 방안 마련

